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방안 연구



**보 성 군 의 회**

#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방안 연구

2025. 11.

연구수행기관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책임자	장 명 선 (지방자치발전소)
공동연구원	김 구 슬 (한국사법교육원)
공동연구원	이 영 숙 (지방자치발전소)
공동연구원	강 하 립 (이화여자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의견이므로  
보성군 의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I.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의 내용 .....	5
2) 연구방법 .....	6
3. 연구 체계도 .....	7
4. 선행연구 .....	8
5. 기대효과 .....	11
II. 보성군 인구 현황 및 저출생 정책 동향 .....	13
1. 보성군 인구 현황 .....	13
1) 보성군 인구 규모 및 세대 현황 .....	13
2) 인구감소 추이 .....	14
3) 인구감소의 구조 .....	15
4)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	17
5) 출산율 및 혼인율 동향 .....	20
6) 생활인구 규모 및 특성 .....	22
2.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현황 .....	27
1)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의 필요성 .....	27
2)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조례 현황 및 과제 .....	29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	32
1) 중앙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32
2)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35
3)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및 과제 .....	38
4. 타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	44
5. 요약 및 시사점 .....	48
1) 보성군 인구구조와 생활인구 특성에 대한 종합 진단 .....	48

2)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개선과제 .....	48
<b>III. 심층면접 결과 분석 .....</b>	<b>53</b>
1. 조사 개요 .....	53
2. 조사결과 분석 .....	54
1) 보성군 저출생 대응 지원 현황 및 효과 .....	54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한 의견 .....	60
3. 요약 및 시사점 .....	68
<b>IV. 지속발전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 .....</b>	<b>73</b>
1. 저출생 대응 법제 개선안 .....	73
1) 인구감소대응 조례 제정의 필요성 .....	73
2)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내용 .....	74
2. 저출생 대응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 .....	76
1) 생활인구 확대 방안 .....	76
2) IB학교 모델을 통한 교육기반형 저출생 대응방안 .....	79
3) 발달장애인 특성화학교 설립 .....	89
4) 갯벌 등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	92
5)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및 지역 정착 확대 .....	95
6) 마을 호텔 사업 .....	100
참고문헌 .....	109

## 표 차례

<표 I-1> 연구체계도 .....	7
<표 II-2> 보성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	13
<표 II-3> 전입 전출 현황 (2020~2024) .....	17
<표 II-4> 평균연령 비교 : : 보성 vs 전남 vs 전국 .....	20
<표 II-5> 보성군 행정동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2020~2024) .....	21
<표 II-6>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비교(2020~2024) : 보성 vs 전남 .....	21
<표 II-7> 생활인구 관련 주요 용어 .....	24
<표 II-8> 보성군 생활인구 구성(2025년 1분기) .....	25
<표 II-9> 보성군 연령별 생활인구 분포(2025년 1분기) .....	25
<표 II-10> 보성군 체류인구 주요 특성(2025년 1분기) .....	27
<표 III-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	53
<표 III-2>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	54
<표 IV-1> IB과정의 구성 .....	81
<표 IV-2> 전라남도 IB학교 현황 .....	82
<표 IV-3> 표선면 인구 변화 .....	84
<표 IV-4> 남원읍 내 행정리별 인구 변화 .....	85
<표 IV-5> 표선면 및 남원읍 내 학교 학생 수 변화 .....	85
<표 IV-6> 정책 추진 전략 및 단계별 실행 계획 .....	87

## 그림 차례

<그림 II-1> 보성군 총인구 추이(최근 10년) .....	14
<그림 II-2> 보성군 총인구 감소 추이(최근 10년) .....	14
<그림 II-3> 연평균 인구감소율 추이 비교 : 보성 vs 전남 vs 전국 .....	15
<그림 II-4>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사망말소 현황 (최근 10년) .....	16
<그림 II-5> 보성군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추이(2020~2024) .....	19
<그림 II-6> 보성군 생활인구 추이(2025년 1분기) .....	25
<그림 IV-1> IB학교의 운영 단계 .....	81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체계도
4. 선행연구
5. 기대효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1)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및 대응계획 수립

#####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증가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년 현재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는 고령사회가 된지 7년만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된 상황임.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합계출산율은 24년 0.75명으로 23년 0.72명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2001년부터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응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21년 전국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지원됨.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와 관할 시도 11곳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 (2) 인구감소지역 증가의 원인

- 농가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자연 인구 감소 증가
  -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임. 이 지역에서 감소된 인구의 90.4%가 농가인구 수 감소에 따른 것임.
  -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지역 소멸과 쇠퇴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음.
  
- 출생률 저하로 자연인구 감소 증가세 커짐
  -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증가하고 있음.
  -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24년 출생률 반등은 30대 여성인구 증가, 2022년부터 혼인 건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으며 추세적 반등 여부는 불확실함.

##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청년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소멸 가속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 증가
  -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66%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감소한 시군구는 전국 60개로 27%에 달하고 있음.
  -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정주여건 및 교육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임금시장 격차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의 가속화가 되고 지역기업도 지역에서 유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짐.

-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전환 가속화로 인한 지방 성장동력 둔화
  - 전국 대학의 34.1%, 학생 수 39.5%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중심의 성장전략이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제조업이 주력인 지방의 성장동력은 급격히 둔화되어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방 사회문화 및 산업 전역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론으로 이어짐.

#### (4) 인구감소지역인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성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보성군은 적극적 대응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보성군의 연간 인구감소 규모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 785명으로 줄어들어,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 출생아 수 또한 2022년 81명 → 2023년 105명 → 2024년 11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하여 지역 내 출산 기반이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전남 22개 시·군 중 보성군의 출산율은 8위, 전국 기준으로도 17위에 올라 농촌지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추진 필요
  - 단순한 출산장려를 넘어 임신, 출산, 양육친화적인 환경구축,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보성군의 인구구조,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특히 출생 기반 약화, 청년·유소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보성군이 직면한 구조적 인구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청년인구 정주 기반 강화,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 나아가 보성군의 자연·생활환경 및 지역자원을 고려한 실천 가능한 정책수단을 도출하여, 인구감소 속도 둔화와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을 기술함.
- 제2장에서는 보성군의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 추세, 생활인구 특성 등 인구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성군이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및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전략적 한계를 확인하며, 다른 지역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성군 인구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저출생 정책수혜자 및 대상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에 대

한 심층면접 결과와 보성군 내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를 기반으로 보성군 인구정책의 실효성, 현장의 수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보성군의 저출생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으로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이동, 교육,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법령자료 검토·분석: 인구감소 및 저출생 관련 보고서, 논문, 도서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함. 국내외 우수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사업 등을 검토분석하여 보성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통계분석: 보성군 인구이동, 현황 및 실태, 저출생 관련 통계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심층면접조사: 보성군 저출생 정책 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1 또는 그룹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심층면접 질문 내용은 보성군에서 지원받은 저출생 대응 정책 내용과 개선점,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및 개선점, 생활인구확대에 대한 필요성,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IB 학교에 대한 의견, 다항축제 등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의견, 청년층 효과적이고 시급한 지원정책, 보성군의 전입하거나 떠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방안, 보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경제부문, 일자리, 문화예술, 교육, 관광, 기타) 등.

- 전문가 TF 운영 및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방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및 자문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 정책방안 발굴하고자 함.

### 3. 연구 체계도

<표 1-1> 연구체계도

단계		주요 내용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	문헌 및 정책 분석	▶ 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수립	- 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수립	▶ 선행연구, 교육 실태, 정책 및 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연구 방향 수립
		▶ 선행연구, 관련 통계 검토 및 분석	- 선행연구, 관련 통계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실태 파악 및 문제점 제시 -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조사 및 분석 단계	조사 연구 및 분석	▶ 심층면접지 개발	- 대상별 심층 면접지 개발을 위한 사전회의	▶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우수한 국내외 사례 검토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인구현황 및 이동에 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 인구현황 및 실태 등 파악 - 정책 검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관련 조례 검토 분석	
법제도 및 정책적 대응방안 단계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지 개발 및 실시	▶ 저출생 대응 효과적 정책방안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방안 등 제시
		▶ 심층면접 결과 분석	- 심층면접 결과 검토·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타 지역 사례 연구	- 중앙 및 광역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검토 분석	
		▶ 우수사례 발굴	- 타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발굴	
		▶ 시사점 도출	- 시사점 도출	
		▶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회	
		▶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간담회 및 TFT 운영	- 간담회 실시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 운영으로 개선방안 도출	
		▶ 저출생 대응 효과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마련	-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각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 개발 및 제시	
		▶ 최종 자문회의	- 최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 자문회의 실시 및 결과 보고서 반영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제출	

#### 4. 선행연구

- 김현민·최지혜(2024)<sup>1)</sup>는 전라남도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2050년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을 통해 5대 분야·15대 전략·100개 사업을 체계화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는 교육·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결혼·양육지원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기업 참여 확대, 외국인 주민 및 이주배경가족 지원 강화, 인구정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한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평가센터 설치를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박진경·이원도·김민영·양원탁·김주락·최민정(2025)<sup>2)</sup>은 2000년 이후 전국 시·군·구의 인구변화를 유형화하여, 인구감소 원인을 산업·일자리 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함. 이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차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제시함. 즉, 대도시는 원도심 재생, 민간투자 결합, 복합개발, 중소도시는 교육·의료·생활서비스 강화, 그리고 농어촌은 외부 인구유입과 기존 인구의 유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함. 또한 대전 유성구, 강원 원주시, 경북 칠곡군의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간 관계성에 기반한 맞춤형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책임성 확보 전략, 중소도시는 인구댐 방어전략, 농어촌은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 전략이 중요하다고 분석함.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댐 확보를 위한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등을 제시함.

1) 김현민·최지혜, “인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바라보는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 전남연구원 JNI 이슈리포트 2024.9. 31호.

2) 박진경·이원도·김민영·양원탁·김주락·최민정,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전략」, 지방행정연구원, 2025.

- 전라남도 의회(2025)<sup>3)</sup>는 전라남도 주요 인구정책(2030 인구종합계획, 2050 대도약계획 등)과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정리한 뒤, 전남 시·군을 시지역/5만 이상 군/5만 미만 군으로 세분화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함. 5만 미만 군(보성군 포함)에 대해 제안한 주요 전략으로는, 생활인구·관계인구 기반의 지역활력 제고(농촌 유학교류캠프, 반값 여행 프로젝트, 청년 귀농인 실습지원, 전남형 교육특구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 제고, 지역 여건에 맞춘 유형별 인구정책 패키지 설계 등임.
  
- 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전남의 2030 인구정책종합계획 100대 주요과제별 내용, 2050 전남 인구대도약 종합계획 120대 세부사업,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154개 세부사업 내용 소개를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유형별 사업수 및 예산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전남 시군 인구구조변화를 시지역, 5만 이상군, 5만 미만 군으로 나누어 분석함. 이를 근거로 전남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모델 구축 방안으로 인구정책모델 구축전략(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인구정책 프레임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역여건에 부합한 유형별 인구정책 사업 추진), 4가지 유형별 추진사업(시지역 거점으로서 청년인구정책플랫폼 기능 확충, 5만 이상 지역, 5만 미만 지역, 기타)을 제시함. 이 중에서 보성군이 속한 5만 미만 지역은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제고방안으로 농촌 유학교류캠프 운영, 반값 여행 프로젝트 확산, 청년 귀농인 실습형 비가림 하우스 설치 및 운영지원,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정착 등을 제시함.

---

3)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2025.

- 최지혜(2024)<sup>4</sup>)는 전남의 청년비율이 전국 최저이며 순유출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맞춤형 일자리'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함. 그리고 청년의 가치관 변화(경험·연대·삶의 질 중시)를 반영하여 고부가가치 청년창업 육성, 전공·경력 매칭형 일자리 설계, 좋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지역 기반 신성장 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특화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
- 여성가족부(2023)<sup>5</sup>)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 현황 및 대응정책을 성찰한 연구임. 지방 인구감소를 견인하는 핵심 집단이 청년 여성임을 강조하면서, 영·호남 농촌에서 여성인구 감소율이 특히 높다고 분석함(전남 6.31% 경남 5.06% 등). 여성 유출의 주요 요인은 일자리 다양성 부족, 돌봄·교육 인프라 부족, 문화·여가 접근성 부족, 지역의 성평등 수준 낮음 등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여성 진출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구조 개선, 주거·직장 인근 돌봄 접근성 개선, 일·가정양립 제도 확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인 지적 운영 강화 등이 제시됨.
- 이민주(2025)<sup>6</sup>)는, 교육혁신(IB교육) 도입이 지역 인구 증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함. 교육을 발전시키면 지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정주·이주가 증가하며, 지역경제·문화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함.
- 전라남도의회(2024)<sup>7</sup>)는 전남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생활인구 개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생활인구 정책 성공사례를 소개함. 이를 토대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

4) 최지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전남연구원, 2024.

5) 여성가족부, 「2023년 지방소멸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023.

6) 이민주,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학교 사례」, 제주연구원, 2024.

7) 전라남도 의회, 「전남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방안」, 2024.

으로 복수주소제 도입, 세컨드하우스 구입 지원, 외국인 및 이민정책 개선,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함.

-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전략은 ▲생활·관계 인구 활용 ▲교육혁신 ▲청년·여성 중심 인구정책 기반 강화 ▲광역 - 기초 연계모델 구축 ▲정책의 성과·영향평가 체계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보성군이 지역의 자연 자원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증가, 교육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주화 인구수를 늘리고, 이주노동자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마을 관광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발전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고자 함.

## 5. 기대효과

- 보성군의 저출생 대응 정책 요구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추진방안 마련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속발전가능성 확보.
- 통합적인 저출생 관련 법제 정비와 정책으로 인구 증가 및 출생을 상승 도모
- 다양한 정책 대응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및 미래사회 인재 확보

## II

# 보성군 인구 현황 및 저출생 정책 동향

1. 보성군 인구 현황
2.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현황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4. 타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5. 요약 및 시사점

## II. 보성군 인구 현황 및 저출생 정책 동향

### 1. 보성군 인구 현황

#### 1) 보성군 인구 규모 및 세대 현황

○ 2025년 9월 기준 보성군의 총인구는 36,684명

- 남성 18,039명(49.2%), 여성 18,645명(50.8%)으로, 성비는 0.97 수준.
- 총 21,679세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69명으로 전국 평균 2.17명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군 지역 전반에서 1~2인 가구 중심의 초소형 세대 구조가 뚜렷하게 진행 나타남. 이러한 구조는 고령층 단독가구 증가와 청년·중장년층의 외부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보성군의 주거정책·돌봄체계·사회서비스 설계에 있어 ‘소형가구 중심 수요’가 주요 정책 변수로 작용할 것을 시사함.

<표 II-2> 보성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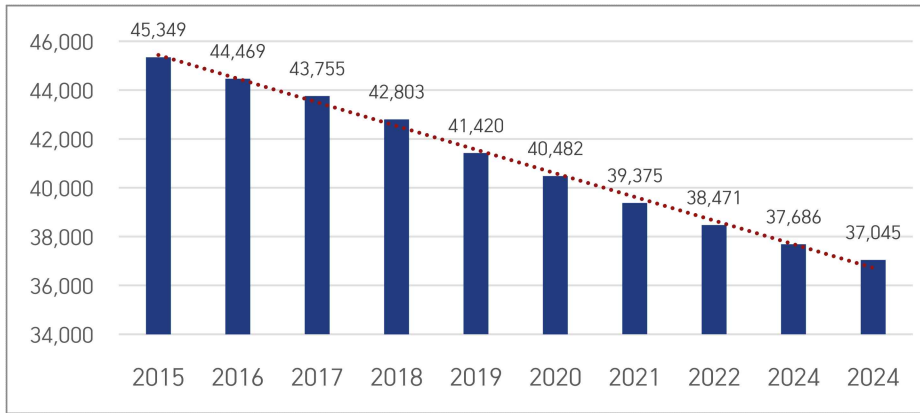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보성군 전체	36,684	21,679	1.69	18,039	18,645	0.97
보성읍	8,350	4,286	1.95	4,087	4,263	0.96
별교읍	10,727	6,233	1.72	5,232	5,495	0.95
노동면	1,052	696	1.51	522	530	0.98
미력면	1,298	819	1.58	655	643	1.02
경백면	1,067	717	1.49	538	529	1.02
울어면	1,095	688	1.59	556	539	1.03
복내면	1,500	965	1.55	727	773	0.94
문덕면	887	598	1.48	460	427	1.08
조성면	3,302	2,077	1.59	1,593	1,709	0.93
득량면	2,481	1,549	1.60	1,242	1,239	1.00
득량면에 당출장소	1,091	656	1.66	523	568	0.92
회천면	2,825	1,740	1.62	1,395	1,430	0.98
웅치면	1,009	655	1.54	509	500	1.02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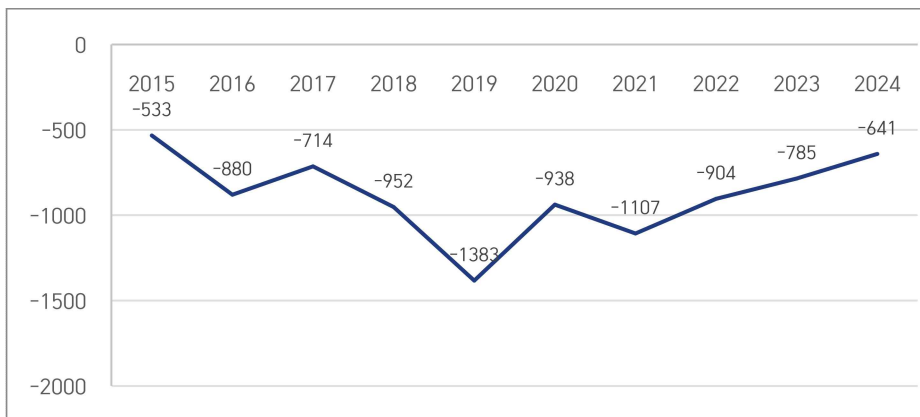
## 2) 인구감소 추이

- 보성군은 장기간 구조적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폭이 완만해지고 있어 감소세가 다소 안정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됨.

<그림 II-1> 보성군 총인구 추이(최근 10년)



<그림 II-2> 보성군 총인구 감소 추이(최근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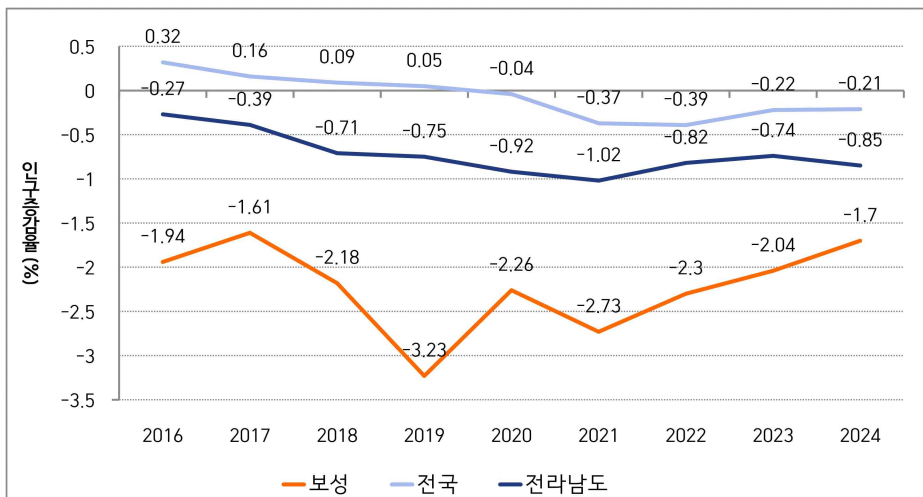


○ 보성군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및 전남 평균보다 큰 폭의 인구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18~2020년 사이에는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2.18%에서 -3.23%까지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인구감소가 가장 심화된 구간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전국은 거의 0%대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남 역시 -0.7%에서 -1.0%대의 중간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대비됨.

- 다만, 최근 3년(2021~2024년) 동안에는 보성군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2.73% → -2.30% → -2.04% → -1.70%로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여전히 전국 평균 및 전남보다 높은 수준의 감소율이지만, 과거 대비 인구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II-3> 연평균 인구감소율 추이 비교 : 보성 vs 전남 vs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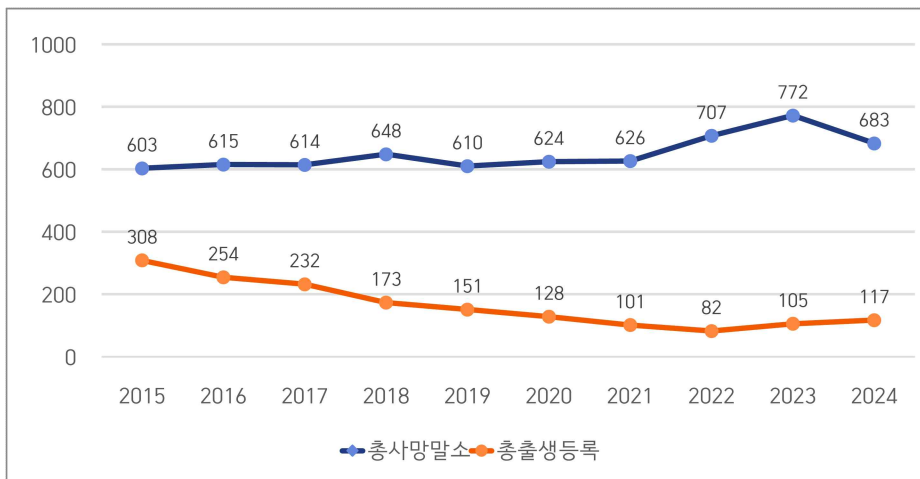
### 3) 인구감소의 구조

○ 보성군의 인구는 자연적 감소(사망 > 출생)와 사회적 감소(전출 > 전입)가 동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자연적 감소의 확대: 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의 구조적 격차

- 최근 10년간 보성군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출생아 수는 2015년 303명에서 2021년 101명으로 감소하여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2022년 이후 소폭 반등이 있었으나 2024년에도 117명에 불과해 출생 기반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
- 같은 기간 사망자는 603명에서 2023년 772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683명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6배에 달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 보성군은 이미 자연적 감소가 불가피한 인구구조로 이행한 상태임을 확인됨.

<그림 II-4>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사망말소 현황 (최근 10년)



○ 사회적 감소의 지속: 전출 우위의 인구이동 양상

- 보성군은 최근 수년간 전출 규모가 전입 규모를 상회하여, 순이동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전입자 수는 2020년 3,570명에서 2024년 2,635명으로 지속 감소하여 전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음.
- 전출자 수도 4,010명→2,724명으로 감소했으나, 아직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순유출 규모는 2020년 -440명에서 2024년 -89명으로 꾸준히 축소되어, 유출 강도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 순이동률 또한 -1.1%(2020년)에서 -0.2%(2024년)까지 완만하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음(陰)의 이동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 특히 청년층·가구 단위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내 정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구조적 요인을 시사함.

<표 II-3>전입 전출 현황 (2020~2024)

연도	총인구(명)	전입자(명)	전출자(명)	순이동(명)	순이동률(%)
2020	40,482	3,570	4,010	-440	-1.1
2021	39,375	3,232	3,544	-312	-0.8
2022	38,471	2,837	3,062	-225	-0.6
2023	37,686	2,621	2,748	-127	-0.3
2024	37,045	2,635	2,724	-8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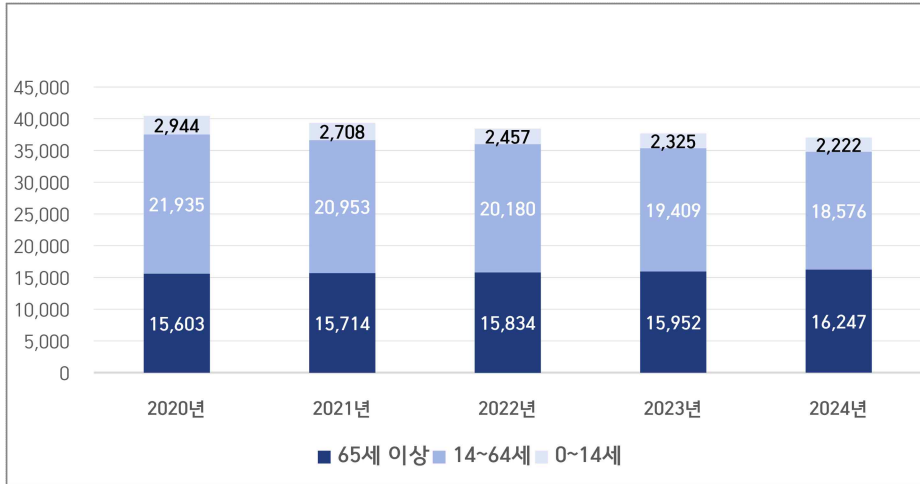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4)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 최근 5년간(2020~2024) 보성군의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층과 유소년층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미 지속되어 온 '초고령·저출산형 구조'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21,935명에서 2024년 18,576명으로 15.3%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구층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함.
  - 유소년인구(0~14세)는 같은 기간 2,944명에서 2,222명으로 24.5% 줄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임. 이는 보성군의 출생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축소가 초등학교 이하 교육 인프라의 유지·통합, 통학권 조정 등 지역 교육서비스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603명에서 16,247명으로 4.1% 증가하여,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령층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보성군의 노년부양비는 87.5로 전국 평균 약 47명 대비 1.85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년층 0.88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고령화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구조 자체가 '저출산·고령화·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취약 구조에 놓여 있음을 의미함.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 노동시장 축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유소년층 감소는 교육·돌봄 인프라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함.
  - 동시에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돌봄·복지 수요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II-5> 보성군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추이(2020~2024)



- 보성군의 평균연령은 58.2세로, 전국 평균(45.7세) 및 전남 평균보다 10세 이상 높아 매우 심각한 고령화 수준을 보임.
  - 남자 평균연령(55.5세)과 여자 평균연령(60.8세) 모두 전국(남 44.6세·여 46.9세) 및 전남(남 47.6세·여 51.2세) 보다 크게 높은 분포를 나타냄.
  - 특히 여성의 평균연령은 남성보다 5.3세 높아, 고령 여성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됨.
  - 보성군 전체의 고령화는 읍·면 단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대부분 지역이 평균연령 60세 전후로 나타남.
  - 보성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보성읍(50.4세)으로, 군내에서 유일하게 평균연령이 50세 초반 수준임. 상대적으로 젊은층과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된 중심지 역할을 반영함.
  - 보성군 내에서 평균연령 57~60세 수준(전국·전남 대비 매우 높은 그룹)은 벌교읍 57.9세(여 60.3세), 노동면 59.4세(여 67.3세), 득량면 58.3세(여 61.2세)임. 읍 단위 지역조차 평균연령이 60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노동시장 연령 구조의 고령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됨.
  - 보성군 내 평균연령 60세 이상 초고령 지역은 미력면(61.8세), 회천면(62.7세), 울어면(62.4세), 문덕면(60.2세), 조성면(62.2세), 용치면

(64.8세)으로, 면 지역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표 II-4> 평균연령 비교 : : 보성 vs 전남 vs 전국

행정구역	평균연령	남자 평균연령	여자 평균연령
전국	45.7	44.6	46.9
전라남도	49.5	47.8	51.2
전라남도 보성군	<b>58.2</b>	<b>55.5</b>	<b>60.8</b>
보성읍	50.4	48.6	52.2
별교읍	57.9	55.4	60.3
노동면	63.4	59.4	67.3
미력면	61.8	58.7	65
겸백면	63.4	59.7	67.1
올어면	62.4	58.2	66.6
복내면	62.5	60	65
문덕면	60.2	58.1	62.3
조성면	62.2	58.6	65.6
득량면	62.8	59.4	66.4
득량면예당출장소	58.3	55.2	61.2
회천면	61.1	58.7	63.5
옹치면	64.8	61.3	68.3

### 5) 출산율 및 혼인율 동향

- 최근 보성군은 군 단위 지역임을 고려할 때 출산지표가 이례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0.79명 → 1.01명 → 1.20명으로 상승함.
  -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정책 확대와 정주환경 개선 노력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5> 보성군 행정동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2020~2024)

	2020년			2021년			2022년_			2023년_			2024년_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보성군 전체	76	52	128	45	56	101	51	31	82	54	51	105	65	52	117
보성읍	26	20	46	17	20	37	23	15	38	21	16	37	27	21	48
별교읍	22	7	29	9	17	26	13	8	21	15	14	29	15	13	28
노동면	2	1	3	2	0	2	0	2	2	0	1	1	0	1	1
미력면	2	0	2	1	2	3	1	0	1	2	3	5	1	0	1
겸백면	2	1	3	1	2	3	1	0	1	3	3	6	1	1	2
울어면	2	1	3	1	1	2	0	0	0	0	1	1	3	1	4
복내면	0	3	3	2	2	4	1	0	1	1	1	2	2	2	4
문덕면	1	0	1	1	1	2	0	1	1	0	1	1	0	0	0
조성면	8	7	15	5	1	6	1	1	2	7	5	12	2	2	4
득량면	2	5	7	1	4	5	4	1	5	5	0	5	4	1	5
득량면예당출장소	4	1	5	1	1	2	1	1	2	0	1	1	3	4	7
회천면	2	5	7	3	2	5	4	2	6	0	3	3	6	3	9
웅치면	3	1	4	1	3	4	2	0	2	0	2	2	1	3	4

○ 그러나 지역의 출생 기반 자체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보성군의 조혼인율은 천 명당 2.1건으로 전국(4.4건)과 전남(3.9건)에 크게 못 미치며, 최근 5년간 혼인 건수 또한 2020년 97건에서 2024년 80건으로 꾸준히 감소함.
- 혼인 감소는 곧 잠재 출산층의 축소로 이어져 향후 출생아 수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임.
- 여기에 더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지속되면서 결혼 적령층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출산율 상승만으로는 인구 감소세 전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II-6>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비교(2020~2024) : 보성 vs 전남

행정구역	2020		2021		2022		2023		2024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전라남도	6,365	3.4	6,201	3.4	6,181	3.4	6,157	3.4	7,049	3.9
보성군	97	2.4	96	2.4	93	2.4	85	2.2	80	2.1

- 따라서 보성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장려 중심 접근을 넘어, ‘혼인 → 정착 → 양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유입·정착 지원, 주거·일자리 기반 강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 양육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출생 기반의 실질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6) 생활인구 규모 및 특성

### (1) 생활인구 분석의 의의

-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음의 인구를 포함함.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한 사람
- 체류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이상·3시간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외국인등록자 및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활동 규모·경제력·정책 수요를 설명하기 어려움. 이에 비해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활력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관광·체류·업무 방문 등으로 지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통계는 지역 활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23.5.18.) 제정을 통해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인구지표 도입, 이를 활용한 지역정책·산업·관광·정주전략 기반 마련이 추진됨.

○ 다만 생활인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 2024-002호임.

-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로서 다른 통계의 인구 정의와 다를 수 있음
- 체류인구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기록된 이동정보로서, 통신 3사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및 가명결합에 따른 결합 실패 등으로 누락된 사람의 정보가 제외되어 이를 보정하였으나 해당 지역 체류인구의 실제값과 다를 수 있음.
- 생활인구, 체류인구 분석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 포함)은 승인액 기준으로 입수한 자료로서, 6개 카드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 및 가명결합 과정의 결합 실패 등으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여 해당 시군구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생활인구 관련 주요 용어

<표 11-7> 생활인구 관련 주요 용어

용어	의미
체류일수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정 지역에 머문 일수
숙박인구	18:00~23:59 사이 체류 + 다음날 00:00~05:59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체류인구 ÷ 등록인구 (지역활력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타시도 거주자 비율	체류지역과 주민등록지역이 서로 다른 체류인구의 비율
재방문율	당월 체류인구 중 직전 2개월 내 1회 이상 체류한 사람의 비율
평균 체류일수 · 숙박일수 · 체류시간	체류자가 한 달 동안 머문 일수 · 숙박일수 · 체류시간의 평균값

(2) 보성군 생활인구 규모

○ 보성군의 2025년 1~3월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91,3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약 37,040명, 체류인구 153,390명, 외국인 약 940명으로 구성됨.

- 보성군 생활인구의 80% 이상이 비정주 인구(관광·업무·통행·쇼핑 등)에 해당함.

- 보성군의 생활인구는 계절 요인에 따라 약 15~30%의 변동폭을 보임.

\* 1월 :225,878명 → 연초 관광·휴양 방문객 증가로 최고치 기록

\* 2월 :153,764명 → 설 연휴 이후 관광수요 급감, 계절적 이동 위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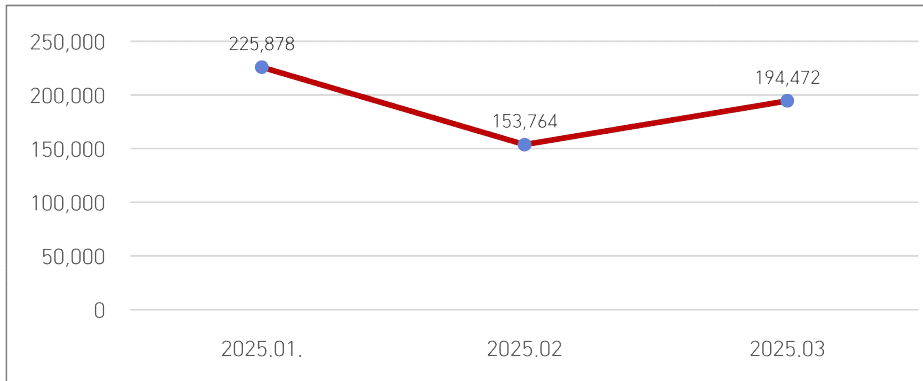
\* 3월 :194,472명 → 봄철 관광객 증가, 녹차밭·산림 관광지 방문 증가

- 성별 생활인구 분포를 보면, 1월 남 53.4% vs 여 46.6%, 2월 남 54.6% vs 여 45.4%, 3월 남 54.2% vs 여 45.8%임. 통근·업무 목적의 남성 방문객 비중이 높으며, 관광객 구성에서도 남성이 다소 높은 지역적 특성이 확인됨.

<표 II-8> 보성군 생활인구 구성(2025년 1분기)

구분	2025.01.			2025.02.			2025.03.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25,878	120,694	105,184	153,764	83,905	69,859	194,472	105,351	89,121
주민등록인구	37,149	18,250	18,899	37,007	18,200	18,807	36,974	18,172	18,802
체류인구	187,725	101,994	85,731	115,825	65,276	50,549	156,616	86,767	69,849
외국인	1,004	450	554	932	429	503	882	412	470

<그림 II-6> 보성군 생활인구 추이(2025년 1분기)



- 연령별 생활인구 분포를 보면, 40대(27.8%), 50대(26.4%), 30대(17.5%), 20대(12.0%), 60대(10.4%), 70대 이상(3.7%), 20세 미만(2.2%) 순으로 나타남. 경제활동 연령층(30~50대)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관광·업무·상권 이용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가 중심을 이룸. 한편 유소년층(20세 미만) 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족 단위 방문객보다 성인 중심 방문이 많다는 특징으로 해석됨.

<표 II-9> 보성군 연령별 생활인구 분포(2025년 1분기)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25.01	13.9%	9.4%	10.8%	15.5%	21.5%	17.8%	11.1%
2025.02	8.9%	6.9%	9.6%	14.0%	22.1%	22.2%	15.8%
2025.03	8.9%	6.1%	9.5%	14.6%	22.8%	23.0%	15.1%

-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관광·계절산업 기반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정주민구 감소 와중에서도 체류인구가 지역 상권과 서비스 수요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3) 보성군 체류인구 특성

- 보성군의 2025년 1~3월 월평균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약 4.1배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8배)과 전남 평균(3.5배)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임.
  - 이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다는 의미로, 보성군 생활경제의 기반이 정주민구가 아니라 체류·방문 인구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임을 보여줌.
- 재방문율은 42.1%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9.3%)과 전남 평균(41.3%)보다 높아 보성군을 반복적으로 찾는 생활권 방문층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됨.
  - 즉, 보성군은 단순히 “한 번 들르는 관광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는 충성 방문객층을 이미 확보한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체류인구의 절대 규모는 크고 재방문률도 높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외부 방문객(타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지 않은 ‘단기체류형·내부순환형 구조’라는 한계가 존재함.
  - 이로 인해 지역에서의 1인당 소비 규모는 낮고, 지출 역시 단기 소비 위주로 머물러 지역경제 파급력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특성이 나타남.

<표 II-10> 보성군 체류인구 주요 특성(2025년 1분기)

구분	보성군	인구감소지역 평균	전남 평균	비교 및 해석
체류인구 배수(배)	4.1	3.8	3.5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가 매우 높음
재방문율(%)	42.1	39.3	41.3	재방문율이 높아 지역 선호도 양호함
평균 체류일수(일)	3.2	3.5	3.6	체류기간이 다소 짧아 체류지속성 낮음
평균 체류시간(시간)	12.1	12.2	12.2	체류시간은 유사한 수준
평균 숙박일수(일)	4.03	3.9	4.2	숙박일수는 중간 수준(평균 이상)
타 시도 거주자 비율(%)	59.77	80.4	72.8	외부 방문객 비중이 낮아 외지 유입 제한적
1인당 카드사용액(원)	110,300	122,000	124,000	소비규모는 작으나 경제기여도 높음
카드사용액 비중(%)	42.1	33.5	33.2	

- 결과적으로 보성군은 체류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율 또한 높아 지역활동을 견인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체류기간이 짧고 소비 수준이 낮은 단기체류 중심 구조라는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복합적 특성은 향후 지역경제 전략이 정주인구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즉, 보성군의 인구감소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생활인구는 여전히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므로, 앞으로의 인구·정주정책은 정주인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체류·생활인구를 장기체류형·소비확대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2.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현황

### 1)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의 인구감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반드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도록 요구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규범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책대상을 기존의 주민등록 기준 '정주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통근·통학·업무·관광 등으로 지역을 이용하는 생활인구 전체로 확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전입촉진 중심의 전통적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정착·체류·관광·지역소비 등 지역활력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확장된 정책 범위를 실질적인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 항목·대상·절차·예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의 충실도는 국가 공모사업 참여나 재정지원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감소 대응 조례는 지방정부의 핵심 자치입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많은 지자체들은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구감소 대응 조례 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체류 유도, 관광·체험 활성화, 지역소비 촉진, 생활서비스 개선 등을 포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한 출산·양육 지원을 넘어, 청년 정착·주거·일자리 연계·돌봄 인프라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함.

### 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현황

-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등은 도 차원의 정주·생활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유입·정착·체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정주·체류·생활인구를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2)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조례 현황 및 과제

- 보성군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출산·양육·청년정착·다자녀·귀농귀촌 등 개별 정책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운영해 왔음. 이들 조례는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출산·보육 지원, 난임치료 완화, 청년층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부분적 기능을 수행하며, 보성군의 인구정책 기반을 구성함.
- 저출생 대응 조례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조례’,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보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출산 전 단계부터 출산·산후·양육·가족확대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

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보성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 이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초기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영유아 양육지원 조항을 통해 육아 비용을 완화하는 등 출생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큼.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감소하는 유소년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의 교육·사회 구조를 안정시키는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조례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강조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양육 초기 부담 완화 등과 정책적으로 정합성이 높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보성군의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다만, 지원 내용이 대부분 금전적·단기적 성격에 머물러 있어 출생·양육을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거·일자리·돌봄 인프라와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 ○ 청년층 지역정착 및 경제기반 지원 조례

- ‘보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기반을 넓히기 위한 보성군의 주요 정책수단임.
- 청년일자리 조례는 지역 내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농어업인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세대교체와 후계 인력 확보에 기여함. 청년발전 지원 조례는 단순 고용 지원을 넘어 주거, 교육, 문화, 지역참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청년정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 이들 조례는 청년 유출이라는 인구감소의 근본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청년 정착 기반 확충·생활여건 개선·지역 활력 회복과도 높은 정합성을 보임.

- 다만, 개별 조례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청년 주거-일자리-정착을 하나의 연계체계로 통합하는 보완이 필요함.

#### ○ 고령사회 대응 조례

-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보성군의 인구구조 현실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농업·돌봄·지역사회 유지 등 필수 영역의 인력 공백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늦추는 실질적 효과를 가짐.
- 이러한 점에서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사회참여·일자리 기반 강화와 정합성이 높으며,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 내에서 ‘고령사회 대응형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

#### ○ 귀농어 귀촌 인구유입 조례

-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중 ‘외부인구 유입 기반 강화’ 축을 담당하는 조례로, 지역 정주민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 이 조례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현장실습, 정착 정보 제공을 포함한 ‘진입 단계 지원’에서부터, 창업·주거·경영 안정화 지원 등 ‘정착 단계 지원’까지 연속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적응 실패를 줄이고 지역 정착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 조례는 농업·어업 기반 지역인 보성군의 특성에 맞추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후계 농어업인 부족, 농촌 공동체의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 보성군의 현행 조례는 대부분 개별사업 중심·정주민구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적 틀은 부족하며, 특히 지역경제가 체류·관광 인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체류·방문·소비 중심 인구)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전혀 없음.

-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생활인구가 이를 크게 상회하는 구조임에도, 생활인구 유입·장기체류·지역소비 촉진을 제도화한 규정이 부재함.

- 인근 시·군은 생활인구 조례 또는 통합형 인구정책 조례를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성군은 제도적 기반에서 취약한 상태로 평가됨.

- 따라서 보성군은 기존의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증진 조례’(가칭)을 제정하여, 생활인구의 정책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류기간 연장·관광·지역소비 확대 등 생활인구 증진 전략을 제도화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남도 공모사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통합형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 1) 중앙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5년을 인구감소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하여 전 분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2125년경 총인구가 약 753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장기 전망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을 국가 존립과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중심을 기존

의 출산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세대·민생 기반 재구조화로 전환 하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크게 ① 예산 구조 개편, ② 거버넌스 재편, ③ 지역 우선 전략, ④ 민생 중심 특별 지원의 4대 축으로 재편되는 중이며, 각 항목별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예산 확대 및 성과 중심 구조 개편

- 정부는 2025년 기준 총 88조 5천억 원 규모의 인구정책 예산을 편성해 전년 대비 6.4% 증액했음. 이 중 저출산 대응 예산 28조 6천억 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출산·양육 분야는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건강수명 연장, 노인 자살률·빈곤율 감소, 돌봄 접근성 개선 등 질적 지표 중심의 관리로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구조조정하고, 직접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②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집행 기능 중심 기관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고, 예산권·조정권·실행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조정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
-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구 TF도 조직 재편·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기능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인구문제를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 구축을 강화하여, 인구정책을 단일 부처가 아닌 전사회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③ 지역 우선 전략 강화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우선 예산 배분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 중임.
- SOC 투자 확대, 농촌 기반소득 지원, 지역 특성 기반 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정책, 청년 정착 인센티브, 돌봄·이동 서비스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일자리·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하고 있음.

#### ④ 민생 중심 특별지원 정책

-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취약계층 추가지원,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등을 포함한 특별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는 특별 지원 우선 적용을 통해 소비여력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생애주기·생활권 기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음.

#### ○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부는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인구 정책 전반을 출산율 중심 지표 → 건강·복지·삶의 질·지역 지속가능성 중심의 종합지표로 전환할 계획임.
- 이는 인구 문제를 단순 출산 장려 또는 인력 공급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주거·돌봄·교육·지역 활력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방향임.
- 또한 인구정책 추진을 중앙정부 단독이 아니라 지역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사회적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예산·조직 차원의 추가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2)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과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전남의 인구는 2015년 190만 명에서 2024년 178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구조적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단순 출산장려를 넘어, 정주·경제·생활권 재편, 귀농·귀촌·생활인구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 전라남도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① 출산·양육 기반 강화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출산 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기초자치단체와 분담)
- 공공보육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및 주거·교육·교통 혜택 제공

### ② 청년·일자리·주거 기반 강화

- 전남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청년 디딤돌·청년 일경험·지역정착형 일자리)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 ‘만원주택(전남형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 청년 정주 지원(예: 청년마을 프로젝트,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③ 귀농·귀촌·전입 인구 유치 전략 강화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단계별(준비-정착-창업) 지원 체계 구축
- 농업·어업 기반 창업 지원, 영농 정착자금 지원, 농촌형 주거 지원
- '전남형 농촌 활성화 모델' 추진: 귀촌·귀향 인구를 마을 단위로 유치하는 방식
- 전입장려금·생활지원금 지원(시군별 차등)

④ 생활인구 기반 지역활력 전략(가장 최근에 강화된 부분임)

- '생활인구'(체류·관광·업무 등 비정주 인구)를 지역 활력 지표로 도입
- 관광소비 확대,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장기체류형 숙박 인프라 확충
- 축제·스포츠·힐링관광 연계로 지역 체류시간 증가 전략

○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법·제도 기반

- 전남도는 최근 몇 년간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2025.4.3.)  
: 인구활력계획 수립 근거, 시군 협력체계, 재정지원 근거 명시
-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2025.5.15.)  
: 생활인구를 관광·경제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2023.12.28.)  
: 청년·신혼부부·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로 정주 인구 확대
- ※ 이 조례들은 시군의 개별 정책을 지원·조정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과 연계되는 정책의 실행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

- 전라남도의 전략은 단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 생애주기 접근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① 생애주기별 전략

- 결혼·출산기: 난임-출산-영아기 지원 패키지

- 청년기: 취업-창업-정주-참여 확대
- 장년기: 귀향·귀촌, 중년 재취업, 재도시화 방지
- 노년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충, 건강 돌봄 강화

## ② 공간 기반 전략

- 지역성장을 위한 '1·3·5 생활권' 재편
- 농산어촌 중심지 기능 강화
- 중소도시와 농촌 간 연결성 개선(교통·디지털 인프라)

## ③ 지역경제·산업 전략과 연계

- 관광·치유·스포츠·문화산업 중심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농업 전환
- 풍력·태양광 등 지역 특화 에너지 산업 육성

## ○ 전남 인구정책의 특징(다른 광역과 비교했을 때)

-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정책에 본격 도입한 전국 최초 수준의 사례
- 농어촌 중심 구조를 반영하여 귀농·귀촌 정책 비중이 매우 높음
-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일자리·농업 기반까지 포함한 종합 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시·군별로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 사이 조례 제정

## ○ 향후 한계 및 과제

전라남도의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부분이 많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지적됨.

- 출산·양육 지원은 강화되어 있으나, 청년층 유입·정착 기반은 여전히 미흡
- 농촌지역 중심의 특성상 일자리 질·다양성 부족
- 생활인구 정책이 조례화되었으나, 지속적 장기체류로 연결되는 구조는 미

완성

- 시·군 간 정책격차가 크고,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 전략 필요

### 3) 보성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및 과제

#### (1) 보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보성군은 2023년 「보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인구 확대, 일자리·경제활력 강화, 청년·미래세대 육성, 정주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정책 체계를 마련했음.

- 기본계획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복합·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략 구성 자체는 비교적 종합적인 틀을 갖추고 있음.

○ 기본계획은 다음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 확충 전략: '보성 프롬나드' 조성, 녹차마을 위케이션, 관광·체류 활성화 등 지역 방문·체류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전략임.

-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전략: 제2농공단지 조성, 외국인 근로자 플랫폼 구축, 보성차산업 재도약 등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고용 확대 및 경제활력을 유도하는 방향임.

- 청년·미래세대 전략: 청년 창업 공간, 임대형 스마트팜, 평생학습관, 농산 어촌유학,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청년 정착 기반과 미래세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정주여건 개선 전략: 돌봄환경 조성, 청장년·시니어 주거단지, 생활SOC 확충 등 교육·돌봄·주거·교통 등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임.

#### (2)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 주요 정책 현황

○ 보성군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출산·양육 지원, 청년 유입 및 정착,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정주 문화·환경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출산·양육 지원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을 캐치프레이즈로 전면에 내세우며 출산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임.

① 출산·산후·영유아 단계별 지원

- 출산장려금 :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080만원)
- 출생기본수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아동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2025년 1월부터 시행).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가정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
-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연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비급여 포함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② 영유아·학령기 돌봄·보육 강화

- 아이돌봄지원 연계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건강가정센터 기반)
- 초등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 임산부·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전남-군 협력)

○ 청년 유입·정착 지원 정책

보성군은 농촌형 청년 순유입을 위해 청년 지원정책을 전입·주거·일자리·문화·관계망까지 확대하고 있음.

① 전입·혼인·정착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 100만원 지원
- 결혼축하금 300만원 지급(보성군 주소 6개월 요건)
- 전입 청년 정착지원금(보성청년희망정착지원금): 1단계 전입지원 → 2단계 주거지원 → 3단계 창업·자립 지원
-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신혼부부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② 청년 일자리·경제활동 기반

-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추진 중)
- 청년마을 프로젝트(2023~):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정착 커뮤니티
- 농촌형 스마트일자리 플랫폼 구축
-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보조금·멘토링·영농정착 패키지)

③ 교육·문화·관계망 정책

- 청년 네트워크 조직 및 청년 문화축제 운영
-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단위 전입 유도

○ 귀농·귀촌·외부 인구유입 정책

농업·어업 기반 지역 특성에 따라 귀농·귀촌 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①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 예비 귀농 지원교육(기초·심화·현장실습)
- 귀어귀촌 창업·경영 안정화 지원(수산 중심)
- 정착 초기 멘토링·집수리·생활 서비스 연계

② 도시민 유치 정책

- 도시민 농촌유학 프로그램(도시 학생+가족 전입 유도)
- 중장년 농촌이주 지원(기술교육·창업 상담)

○ 정주 문화·환경 기반 구축 정책

- 보성 프롬나드 조성
- 보성녹차 관광지-읍내 상권 연계 프로젝트
-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전통시장·먹거리·공예연계)
- 갯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순천-보성 연계): 생태체험형 관광벨트, 블루 카본프로젝트 참여.
- 보성형가족친화마을 조성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 지역특화형 노노케어·공익활동·민간참여형 일자리 확대
- 농촌활동 연계형 시니어 일자리 발굴

(3)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개선과제

- 전반적으로 보성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여 분야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행 체계·지표화·전략 연계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생활인구 대응', '청년정착 기반', '고령사회 구조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 정주인구 중심 대응이 여전히 강함 : 생활인구 전략의 제도화 미흡
  - 기본계획은 생활인구를 핵심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생활인구를 정책대상으로 명문 규정한 조항이 없음.

- 관광·체류·위케이션·지역소비 확대 등은 개별사업 형태로만 존재하며, 이를 포괄하는 법적 틀·정책목표·지원기준·예산체계가 부재함.
- 이로 인해 생활인구 기반 인구활력 전략을 강조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정합성이 낮고, 정부·전남도 공모사업과 연계도 제한적임.
- 생활인구를 보성군 인구정책의 제도적 축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단위 중심의 대응 : 전략 간 통합 부족

- 기본계획에 다수의 개별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출산·청년·귀농·정주·상권·관광 등 개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함.
- 예를 들어, 프롬나드·위케이션(생활인구), 스마트팜·농공단지(일자리), 평생학습·교육사업(미래세대) 등이 각각 기능하지만 정주·경제·교육 인프라가 상호 보완되도록 설계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낮음.
- 전략 간 연계성과 정책 패키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착 정책의 한계 - '청년부족 지역' 특성 반영 부족

- 기본계획은 청년을 핵심 인구집단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정책은 청년창업·스마트팜 등 경제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 청년의 정주 결정을 좌우하는 주거 접근성, 이동 편의성, 문화·여가 인프라, 관계망 형성 기반(커뮤니티) 등 핵심 요인이 정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음.
- 또한 보성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청년 유출의 구조적 요인(교육기회 부족, 도시 접근성, 일자리의 질·경력경로의 한계)을 해결하는 전략이 미흡함.
- 이에 따라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단기 사업 위주의 접근에 머무르고 있음.
- 청년정착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여건·사회적 기반 강화 전략 필요함.

○ 인구변화 예측·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미흡

- 기본계획은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현황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정책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교한 인구·사회경제 데이터 기반 접근이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중장기 인구수요 예측, 연령대별 진출·유입 패턴 분석, 생활권·권역 단위의 미시적 이동 분석 등 정교한 예측 모델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교육·의료·복지·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보성군의 실제 지역활동을 좌우하는 생활인구 약 19만 1천 명(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4.1배)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대해, 생활인구의 성격(체류 목적, 소비 패턴, 체류기간), 계절적 변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정책적 해석과 대응 전략이 미흡함. 또한 생활인구의 규모와 변동성이 지역경제·상권·교통수요에 어떤 장기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함.
-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강화 및 생활인구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필요함.

○ 고령화 대응 정책은 있으나 고령사회 구조 전환 전략 부족

- 기본계획은 노인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고령화 대응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정책이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리모델링, 커뮤니티 케어형 주거), 고령층 맞춤형 정주유치 전략(은퇴자 유입, 귀촌형 고령층 전입 확대)과 같은 정주 기반 강화 요소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지역의 의료취약성·돌봄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료-요양-돌봄-주거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Community Care) 구축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고령층 증가가 지역사회 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력도 제한적임.
- 이로 인해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 장기 체류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사회 유지 등 구조적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원 조달 및 실행 관리 구조의 실효성 검토 부족

- 기본계획은 인구감소 대응 과제의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 구조와 조달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사업별 총사업비 추계나 연차별 재원 배분 방식, 지방비·국비·도비 간 분담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정책 리스크가 존재함.
- 또한 인구정책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유치, 공공-민간 협력(PPP), 지역기금 조성 등 다양한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여, 단일 재정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우려가 있음.
- 더불어 기본계획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지구 지정 및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행정 조직·인력의 역량 한계, 사유지 보상 문제, 복수 사업 간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며, 사업별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전략(Contingency Plan)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재원 다각화 전략, 실행 위험관리, 사업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4. 타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2.24.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함.  
이 중 보성군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들을 사업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결혼·정착 기반 강화 우수사례

- ① 성남시 공공 만남 주선 프로그램('솔로몬의 선택')

- 내용: 연애·결혼 특강 → 1:1 대화 → 커플 매칭까지 전 과정 지원
- 성과: 2년간 288쌍 매칭, 실제 결혼 성사 사례 있음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농촌지역은 사회적 교류 기반이 취약하므로, 군 주관 공식 만남 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유입(귀촌 청년 포함)에 효과 큼. 지역 호텔·카페·관광지를 활용해 '보성형 소셜 매칭 프로그램' 구성 가능.

## ②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급

- 내용: 신혼부부 1인 250만 원(부부 500만 원) 지원
- 보성군 적용 가능성: 기존 출산지원 중심 구조를 넘어 '결혼 단계부터 정착 유도' 정책으로 확장 필요. 청년 전입 증가와 결혼 기반 형성에 직접적 효과 기대됨.

## ③ 충청북도 행복결혼공제(5년 만기 5천만 원)

- 내용: 본인·기업·지자체가 공동 적립하는 장기 공제
- 보성군 적용 가능성: 지역기업(녹차·농식품·관광업)과 연계한 청년·신혼부부 장기자산 형성 프로그램 도입 가능.

## ○ 주거·정착 유도 우수사례

### ① 서울시 '미리내집' / 인천 '천원주택'

- 특징: 장기 거주 보장(서울 최대 20년, 인천 6년), 매우 저렴한 임대료 (예: 인천 월세 1일 1,000원=월 3만원)
- 보성군 적용 가능성: 청년·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해 보성형 장기공공임대(귀농형 공공임대) 모델 도입 가능. 전남형 공공임대(만원주택 등)와 연계하여 체류→정착 구조 전환에 유용함.

## ○ 임신·출산 지원 우수사례

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내용: 임산부 1인당 70만 원 교통비 지급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면적이 넓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군의 특성상, 임산부 교통비·택시 이용권 지원 효과 매우 큼.

② 충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24만원)

- 내용: 전국 최초 시행, 임산부 식비 부담 완화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보성군의 대표지역산업인 녹차·농산물과 연계한 임산부 꾸러미 제작 가능.

③ 광주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 내용: 가사도우미 파견(최대 20만원 지원)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농촌지역의 돌봄공백 해소에 즉효성 큼. 보성군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연계하면 출산초기 부담 완화 체계 구축 가능.

○ 출산·산후 회복 지원 우수사례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전국 21개소)

- 사례: 전남 해남·완도·순천·나주·강진 등 다수 운영
- 보성군 적용 가능성: 인접 지자체와 공동협력 방식으로 권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

○ 양육·돌봄 지원 우수사례

① 24시간 긴급돌봄(충남·광주·경북 등)

- 내용: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부모 애로 해소(충남 '아이키움뜰', 광주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경북 '119아이 행복돌봄터')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맞벌이·농업인 가구 대상 야간·주말 긴급돌봄 체계

도입 가능. 인근 읍·면 단위 돌봄 공동체와 연계해 비용 절감 가능.

② 조부모 돌봄수당(서울·광주·경기·경남·울산)

- 내용: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 지원시 수당 지원(월 20~60만원)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농촌은 조부모 양육 비율이 매우 높음 → 보성군 실정에 특히 적합.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 효과

○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사례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해남군·영광군·광양시 등 전남 포함)

- 내용 :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24. 최대 월 150만원 → '25. 최대 월 250만원)에 추가하여 휴직 시 소득감소분을 보전
- 보성군 적용 가능성: 전남 인근 시군과 평준화 필요(지역 간 정책 격차 해소).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출산·양육친화 지표 개선에 핵심적임.

②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농어업인 대체인력비 지원

- 내용: 소상공인 출산시 3~6개월간 월 100~200만원 인력대체비 지원(부산·광주·경북), 여성 농어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비용 90일간 일 6.4~9.4만원 지원(경기·전북·경북·경남), 12세 이하 자녀 양육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6개월간 50~60만원 지원(대전, 광주)
- 보성군 적용 가능성: 보성군은 농업·자영업 비중이 높아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사업 중 하나임.

## 5. 요약 및 시사점

### 1) 보성군 인구구조와 생활인구 특성에 대한 종합 진단

○ 보성군은 지속적 인구감소 - 초고령화 - 청년·유소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농촌형 인구위기 구조에 놓여 있음.

- 총인구는 3만 6천 명대, 세대당 인구는 1.69명으로 축소되어 1~2인 가구가 일반화되었고,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대로 자연감소가 고착된 가운데 전출 초과에 따른 사회적 감소도 이어져, 특히 청년·가구 단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임. 생산연령·유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해 노년부양비와 평균연령이 전국·전남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교육·노동·복지·의료 전 분야에서 고령사회 대응이 전제 조건인 지역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2025년 1분기 기준 생활인구는 약 19만 1천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5배 이상 비율(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4.1배)이며, 30~50대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재방문률도 40%를 넘는 등 체류·관광·상권 이용 잠재력이 매우 큼.

- 즉, 보성군은 정주민 기준으로는 구조적 위기, 생활인구 기준으로는 높은 활동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인구정책은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감소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인구를 정주·장기체류·지역소비 확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개선과제

○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산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삶의 질·정주환경·생활인구·지역경제를 포함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응을 국가적·광역적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출산-양육-보육-주거-일자리-돌봄-지역활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보성군에 중요한 정책적 전제조건을 제공함.

- 중앙정부는 인구위기를 단일 지표(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지역 지속 가능성 위기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성과 중심 예산구조 전환,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회복을 정책 중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향후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삶의 질, 건강, 지역 지속가능성, 생활여건을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어, 지방정부는 단순 출산장려 정책 이상의 구조적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임이 확인됨.
  
- 전라남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인구감소를 겪는 광역단체로서, 출생지원·청년정착·귀농귀촌·생활인구 확충·군(郡) 지역 특화 전략을 결합한 광역형 인구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음.
  - 도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만원주택 지원 조례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군의 정책을 조정·지원하는 구조를 갖추었고, 특히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정책의 중심축으로 도입하며 관광·장기체류·관계인구 형성 등 ‘정주 외 인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정주인구 기반이 급감하는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중앙 - 광역의 이러한 인구정책 방향은 보성군의 인구정책 재구성에 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상위 기준을 제공함.
  - ① 생애주기 기반 통합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중앙정부와 전남 모두 출산-정착-양육-돌봄-주거-일자리-노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통합 인구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반면 보성군 현행 정책은 출산·양육 및 청년·고령·귀농귀촌 정책이 개별 조례와 단위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어 세대 간·단계 간 통합성이 부족함.

- 특히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우수사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결혼·주거 패키지, 임신·출산·영유아 통합지원, 24시간 긴급돌봄, 조부모 돌봄지원, 장기체류형 관광·체험 프로그램(정선·완주 사례), 청년마을·청년커뮤니티 사업(전북 진안·강원 양구 사례) 등 단계별·연속적 서비스 제공 모델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보성군도 결혼-주거-출산-양육-교육으로 이어지는 ‘보성형 출생·양육 패키지’, 고령층 돌봄-주거-건강을 연계한 ‘보성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청년 정착·생활여건 패키지 등을 구축해야 중앙 및 광역의 인구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

### ② 생활인구·관계인구 중심 전략의 제도화 필요

- 전라남도는 생활인구를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관광·장기체류·상생 프로그램을 결합해 광역 단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그 외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체류시간 증가·재방문률 제고·지역소비 촉진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농촌지역에서 실질적 인구활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 보성군은 이미 생활인구가 정주민구의 5배 이상(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4.1배)에 달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례와 인구정책은 여전히 주민등록 인구 중심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확인됨.
- 보성군은 생활인구 정의·지원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장기체류·위케이션·관광·상권 연계, 체류인구의 지역소비·재방문·관계인구 전환 전략 등을 제도적으로 담아내야 하며, 이는 중앙 및 광역의 인구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 됨.

### ③ 청년정착 전략의 구조적 재편 요구

- 중앙·광역 정책 모두 청년정책의 핵심이 주거·이동성·교육·문화·커뮤니티 임을 강조함. 또한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확인된 청년정착 사업은 대부분 청년마을, 청년커뮤니티 공간, 창업보다는 “생활여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성군은 현재 청년창업·스마트팜·청년농어업 조례가 존재하지만, 청년의 실제 정착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주거 접근성·문화·교통·관계망·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임. 이는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청년 귀향·귀촌 정책과도 충분히 연동되지 못함.
- 보성군은 광역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의 청년정책을 ‘청년 주거 안정(청년주택·공공임대·빈집 리모델링), 관계 기반 청년 커뮤니티 형성, 교통·디지털 인프라 강화, 귀향·귀촌 청년 정착 패키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④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의 질적 전환

- 중앙·광역 모두 고령화 대응을 돌봄·건강·주거·지역경제·사회참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보령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고령친화 주거 지원, 지역사회케어, 보건-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은퇴자 유입 모델 발굴 등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⑤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및 재원 전략 강화

- 중앙과 광역 모두 성과 중심·지표 기반·지역 우선 배분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우수사례에서도 지표 기반 평가체계가 공통적으로 확인됨.
- 보성군은 인구·경제·관광·교통·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정책과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보성군은 생활인구 규모·변동성·소비 패턴 분석, 읍·면 단위 수요 예측,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지방소멸대응기금·국도비 확보 전략 등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Ⅲ

##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 Ⅲ.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 조사 개요

- 보성군의 저출생 대응 지속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우선 저출생 정책의 수혜자, 잠재적 수혜자, 업무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표 Ⅲ-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면접 대상자
정책 수혜자	남 2명, 여 2명
정책 잠재적 수혜대상자	남 1명, 여 1명
업무담당자	공무원 2명

- 보성군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더 개발해야 할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들음.
-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저출생 대응 정책의 수혜 실태 및 지원 효과, 출산이나 자녀양육시 어려움 점, 보성군으로의 유입이유 및 유출 이유에 대한 생각,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중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 축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 IB 학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 청년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경제부문, 일자리 부문, 문화예술 부문, 교육 부문, 관광 부문, 기타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행함

<표 III-2>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출생 대응 정책 중 지원받은 정책 : 경로, 지원시 어려운 점, 정책 효과, 개선점</li><li>• 출산이나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li><li>• 보성군으로 유입하는 가장 큰 이유</li><li>• 보성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li><li>• 생활인구 증가 인식 및 필요한 지원정책</li><li>• 보성군 축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점</li><li>• 청년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B학교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li><li>• 보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 영역별 필요한 정책 : 경제부문, 일자리 부문, 문화예술 부문, 교육 부문, 관광 부문, 기타 등</li></ul>

## 2. 조사결과 분석

### 1) 보성군 저출생 대응 지원 현황 및 효과

#### (1) 저출생 대응 지원정책 인식 경로 및 지원 효과

##### ○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경로 및 지원효과

-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정책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없었다고 함. 다만 한번에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약간 복잡해지기도 하는 점이 있고, 모바일 신청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피드백이 없어서 불편하였다고 함.
-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금전적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우세했으며,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나 양육 환경구축도 중요한데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에만 국한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특히 군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했어요. 저는 출산전 바우처와 출산 바우처 등을 모두 지원 받았습니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면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친절히 응대해주셔서 신청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둘째아이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어요

아기 낳고 나서 아기용품 같은 거 받았고요. 산후조리비를 못 썼는데,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걸로 대신 준다고 하더라고요. 8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부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일단은 그렇게 지원받은 것 같습니니다

약간 혼선이 있기는 했어요.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팜플렛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지원을 신청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신청을 했는데, 모바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신청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청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빠(남편)가 병원에 있다가 면사무소까지 직접 가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하니깐, 한전이랑 이런 거는 다 따로 저희가 일일이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꺼번에 신청이 되는데, 우리는 어찌다보니 따로 하게 된거죠,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되니까 번거로웠어요, 처음 아기를 낳으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 (2) 저출생 대응 지원정책 개선점

- 저출생 대응 지원정책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구축 필요
  - 저출생 대응 지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중요한 데 보건소에도 병원에도 소아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아이가 아픈

경우 차로 30-40분 걸리는 인근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점이 몹시 힘들다고 함. 또한 금전적 지원정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금전적인 지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제적인 것만 계속 지원이 돼버리고... 물론 금전적인 도움이 중요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 병원이용 등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일단은 좋아요. 좋은 점은 ... 제가 순천 살다가 광주를 갔었는데, 광주는 혜택이 많이 없더라고요. 광주는 대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출산에 따른 혜택이 보성보다는 더 아래였어요. 그런 거 비교하면 보성의 지원정책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군에서 그래도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거는 아무래도 금전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니까, 적어도 일정시기까지는 금전적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크면 그때는 교육일 것 같긴 한데 ... 지금은 제 품 안에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서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소아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아과가 없으면 꽤 오래되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차로 30-40분은 너무 길어서 이 부분때문이라고 보성군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 (3) 출산 양육시 어려운 점 및 개선점

#### ○ 소아과,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터 등 필요

- 자녀출산은 이미 출산시기를 알고 있어서 별로 커다란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으나, 자녀양육시 병원이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우며, 키

즈카페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 상황이라 매우 자녀양육 환경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키즈카페는 아이들 놀이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양육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함.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차로 장시간 이동하여 인근 도시로 간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상황임.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환경을 보성군에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이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서비스 등 현실적인 육아 도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2차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돈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거든요. 부모가 시간을 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자영업자인 저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키즈카페에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성군에는 키즈카페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도 없어서 자녀양육을 하기에 어려워요. 키즈카페에 안 갈수는 없으므로 차로 이동하려면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등등--. 내년에는 센터가 설립되어 키즈카페가 생긴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아야죠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없어요, 문화센터조차 없어서 순천이나 광주로 가야해요. 엄마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 이런것들 다 해주고 싶잖아요. 키즈카페랑 문화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성에서 사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조용하고 오붓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인데, 부정적인 면은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일단 병원 문제와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큼니다. 큰 병원이 없어서 아이에 대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부분이 많은 걱정이 되고, 초-중-고 교육에 대한 상황을 생각 할 때 보성에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4) 보성군의 인구 유입과 유출의 원인

##### ○ 자연환경, 가업 등으로 유입하나 거의 힘든 상태임

- 보성군으로의 인구 유입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고향이고 직업도 여기에 있으나 살고 있고 자연환경도 좋고 교통체증도 없어서 괜찮다고 볼 수 있긴 하나 자녀양육 환경 구축이 안 된 상태라서 유입하는 인구를 찾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자녀양육 미흡, 일자리 부족, 노후된 주거환경 등으로 청년 유출

- 보성군으로부터 유출은 대부분 자녀양육문제로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함.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보성군을 떠나고 노년층은 큰 병원이 없어서 병원이 있는 도시로 유출된다고 함.
- 인구 유출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반면 보성군에 일자리가 있어도 알맞은 주거환경이 부족하여 떠난다는 의견도 제시함. 집값도 싸지 않고 신혼 부부를 위한 아파트도 부족한 상태이고 기존의 주택들은 노후화되어 해서 주거문제로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도 불편하여 아예 직장도 거주지 근처로 옮겨서 살게 되므로 유출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임.
- 또한 청년층이 즐길수 문화예술 공간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결혼을 하면 인근도시로 이주하겠다고 하고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필요함.

고향인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다가 부모님 영향으로 다시 오는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건 일자리. 막상 일할 데가 솔직히 없어요. 지금도 일할 데가 없고,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면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서 일 할 곳도 없을 거예요. 저희 시누이언니도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 강진으로 출퇴근하셨어요. 보성은 강진보다도 일자리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층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들면, 젊은이들은 솔직히 한창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보성에서 술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술 먹을 곳이 없어서 술을 못 먹었고, 줌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녹차밭 한 두 번 정도 가고, 산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도 그렇고 저녁에 술자리도 그렇고 그냥 낮에 활동할 때도 그렇고 놀 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젊은층에게 보성은 매력이 없어요.

지금 짓고 있다는 복합문화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이 좀 들어오면은 그때는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

저희도 집을 못 구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천원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물론 대도시들이 월세 전세 다 비싸다고 하는데, 보성도 솔직히 싼 편은 아니예요. 싼 편이 아니니까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돈 주고 살 바엔 조금 보태서 다른 지역에서 살지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면 일자리도 더 있으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병원 때문에. 여기는 큰 병원이 하나(아산병원) 밖에 없으니까. 저희 시할머니도 지금까지 보성에 계시다가 서울로 가셨어요. 병원진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서울 계신 친척 어른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보성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암튼 연령대 별로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을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원래 보성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보성은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 아이 등하원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보성에서는 제가 야근을 할 때 아이의 등하원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는 문화센터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보성은 어르신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도시에서(보성 인근의 광주나 순천) 신혼집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이 있는 보성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한 의견

### (1) IB 학교에 대한 인식과 의견

#### ○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필요

- IB학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교육 때문에 인근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면 좋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함 - 글로벌 학교인데 돈이 안 든다면 매우 환영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반면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IB학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 진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4개월이지만 점점 클 거잖아요. 이사는 갑자기 가는게 아니니까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IB학교가 보성에 있으면 인구유출도 막고 유입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교육으로 인해 이동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보성군에서 계속 남아서 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자녀교육에 목매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도 글로벌학교인데 공립이라 돈도 안 든다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구열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거면 적당히만 해라 이런 주의라서 ...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도부 때문에 보성에 오는 경우도 있으니 IB학교처럼 특별한 학교가 있으면 유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2)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과 의견

### ○ 생활인구 증가 및 정주화 필요

-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고 관광객 등 이동하는 생활인구를 어떻게 정주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 관광지 등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

-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을 하러 와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다시 보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느낌이 드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임

### ○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위한 인구증가도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주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인구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놀 데가 너무 없습니다. 여행지가 너무 없어요. 제가 남편과 장거리 여행 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많이 다녔는데, 보성은 대한다원과 울포 해수욕장 정도 생각나고 한 번 다녀오면 또 다시 찾아갈만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요. 녹차밭도 사진 한 번 찍으면 끝이잖아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기 낳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완도를 갔었는데, 완도에서는 타 지역 사람이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더 없어서 줘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보성도 그런 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지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녹차 밭에 왔으니까 녹차 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해산물 이런 거 사 가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지역화폐 이용에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인구 외에 이주노동자를 지원하여 보성군에 정주화하는 프로그램 도입과 실시가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화된 인력을 보완해 줄 것이며 이들의 정주화는 보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 생각해요

### (3) 보성군 축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

#### ○ 다향축제 명칭을 녹차축제 등으로 변경 필요

- 보성군민은 축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크지 않으며 예전보다 외지인들에게도 보성 차 축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 보성군이 차축제로 유명한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향축제'보다는 '녹차축제'라고 하는 것이 나을텐데 이 명칭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인터넷에 검색하면 보성이 녹차축제로 유명한지 정보가 안 나옴. 사실 청년층은 '다향'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모르므로 축제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축제기획 필요

-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들은 보성에는 젊은 층이 와도 올리브영조차 없으므로 이들을 유인할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군 차원에서 올리브영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함.

○ 다양한 경험 등 축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축제시 유명인을 불러오는 것보다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추억에 남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매년 유명인을 불러서 하는 일회성 행사는 별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울포 해수욕장은 광주에서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바다예요.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더 효과적으로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방향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젊은 층 타겟으로 광주에서 ‘뽕’ 페스티벌도 했고, 대구에서 ‘떡볶이’ 페스티벌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녹돈’ 이라든지 ‘녹차라떼’ 라는 인기 많은 상품명으로 축제 이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축제에 부스에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아쉬운게 뭐냐면 연예인들 중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이 확 물리게 하든지, 애초에 안 부르고 그 돈으로 다른 이벤트를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정쩡하게 축제를 하는 느낌이에요.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뿌리게 다향대축제에서 좋았다고 평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관광시간 상생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다향 축제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 식상하다고 함.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을 좋아하나 녹차밭을 올라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쉽지 않고, 젊은 층은 녹차밭에서 사진 한번 찍고 나면 그만이므로 관광객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관광지 방문 시 인증을 통해 지역 굿즈를 선물로 주는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로 제시됨.

○ 축제에 대해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이나 SNS등을 활용한 홍보와 축제에 오면 색다른 경험을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녀간 후에도 후기 공모전 등을 통해 시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녹차하고 꼬막이 있는데, 꼬막은 보성 꼬막이라고 하지 않고 ‘벌교 꼬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성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녹차는 보성 녹차가 유명하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녹차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3~4살 때 그때는 엄청났던 거 같아요. 때 사촌 언니가 저 데리고 보성 여기 녹차밭도 자주 오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미디어다 뭐다 하면서 많은 게 발전이 돼 가는데, 여기 보성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그 녹차, 녹차 밭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녹차밭이나 그런 자연을 좋아하는데, 녹차밭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축제할 때 보니까 기차 같은 것도 한 번씩 있긴한데 ...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한정적인 것도 문제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축제 홍보도 잘 안되어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포스터 등을 붙이는 방법이 아닌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열어서 각 연령층이 다가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간단한 상품도 지급하고 아니면 참가후기 등에 대해 시상을 하면 더욱 이들이 홍보대사가 되어 홍보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 (4) 청년층 유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 ○ 청년층 일자리 발굴 필요

- 청년층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이지만, 보성군은 큰 규모의 제조업이 없고 열악한 상태임. 따라서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유치 등이나 쇠퇴해 가는 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차문화나 차를 이용한 상품이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청년층 유입을 위해 창업프로그램 개발

- 청년 창업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아이템이 풍부하지 않고 청년을 위한 주거 시설 여건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청년층을 유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 그러므로 군 차원에서 창업아이템을 개발,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 만원 주택 대상자 확대 필요

- 주거면에서도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므로 만원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만원주택에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을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공간 필요

- 요새 젊은 세대는 일과 문화와 여가를 동등하게 중시하므로, 이들의 정주화를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예술공간 및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임.

사실 여기서는 창업할만한 아이템이 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꼬막을 인터넷에 파는 것 정도 떠올릴 수 있는데 .... 암튼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대출 그런 거는 해 준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창업 지원은 결국 자영업자들을 돕는 건데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1인 이상 2인~3인으로 커지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카페, 빵집 아니면 피자집 이런 곳인데 보성은 이제 멀리 봐야 돼요. 제대로 된 비전을 키워서 개발을 해야지 단기성 지원은 결국 인구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자꾸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택문제는 사실 큰 주택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원하는것도 아니고 청년의 경우 원룸집에 들어가도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 곳에 살 수가 없죠. 청년창업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도 없구요. 중소기업도 없고...

만원주택은 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도 공무원은 배제되고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 여기서 살 수도 있을 텐데요. 보성이 원룸이나 집 값이 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원룸도 월세 40만원 정도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아요. 주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보성에 왔을 때에도 살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젊은층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솔직히 한창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보성에서 술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술 먹을 곳이 없어서 술을 못 먹었고, 좀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녹차밭 한 두 번 정도 가고, 산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도 그렇고 저녁에 술자리도 그렇고 그냥 낮에 활동할 때도 그렇고 놀 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젊은층에게 보성은 매력이 없어요.

지금 짓고 있다는 복합문화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이 좀 들어오면은 그때는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

창업 지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저리로 한다 던지 하는 방식 이다보니 위험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성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이템 자체가 한정적이고, 잘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 인구가 더 많은 순천이나 광주 쪽에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은 일만 하지 않아요 일과 여가를 같이 즐기려고 하므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여가나 쉼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에서는 일 생활균형이 늘 이루어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주어 이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숙박시설 정비

#### ○ 보성군 마을 호텔 및 홍보 다각화

- 보성군의 자연환경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고 숙박시설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성에 대한 홍보를 보다 다양화하고 보성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스템프를 찍으면 보성굿즈를 주는 방안 등 생활인구 등 많은 사람들이 보성을 방문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 아이디어 개발

- 생활인구 확대, 청년층 인구 유입 등을 위해서는 관광지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늘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보성군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보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울포 해수욕장에 근처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나 일본을 보니까 마을전체가 호텔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보성은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울포 해수욕장, 공룡 박물관, 예당습지, 중량 기차역, 대원사 등등... 개발과 홍보를 통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어요. 각 관광지를 돌면서 스탬프를 찍고 스탬프 찍은 개수에 맞게 보성굿즈를 받는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엮어서 보성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관광지에 엄청 큰 걸 바라는데 멋지게 사진찍을 수 있는 곳이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보성군 차원의 개발도 좋지만 개인이 개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 있는 간담회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의견을 통해 보성의 인구증가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3. 요약 및 시사점

-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보성군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인구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주·생활·교육·경제·관광·이주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종합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면접을 통해

확인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연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보성군은 생활인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생활인구 증가 → 장기 체류 → 정주 유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생활인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계인구(보성 애호층) 명칭 공모 및 멤버십 운영, 관광·소비 시 리워드 부여 등 생활인구와의 지속적 관계 형성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장기 체류 및 전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대상 장기체류 주거, 공동작업실, 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등 정주 인프라 연계도 병행되어야 함.
  
- 둘째,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 확충이 요구됨.
  - 현재 보성군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은 금전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우수하나, 양육환경의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특히 소아과 부재, 키즈카페·어린이 놀이터 부족, 학령기 교육·사교육 인프라 취약 등은 청년·가구 단위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이 때문에 출산율 상승이 정주 유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환경 기반의 개선이 시급함.
  - 또한 심층면접 의견을 반영해, IB학교 도입 등 공교육 혁신 모델은 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청년층 전입과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성군의 정체성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축제·여가 전략이 필요함.
  - 보성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지 간 연계 부족, 콘텐츠

츠 노후화, 브랜드 인지도 약화 등이 지적됨.

- 이에 새로운 전략으로, '다향축제' 명칭 변경(예: '보성녹차축제') 등 명확한 브랜드 재정비, 차밭 방문 중심의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매년 새로운 콘텐츠·이벤트 개발, 관광지 연계 스탬프 투어, 기념품 제공 등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 도입, 세계자연유산 갯벌과 연계한 빨배 체험·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됨.
- 이는 단순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넷째, 청년 유입·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문화환경의 종합 개선이 필요함.

- 보성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주거환경 노후화, 청년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일자리의 질 및 경력경로 한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됨.
- 따라서 차·키위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 산업 육성, 농촌형 디지털·콘텐츠 산업(IT·애니메이션 등) 기반 마련, 청년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단계별 지원 강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전남형 만원주택 연계 등) 도입, 청년 문화공간, 스포츠·예술 활동 공간 조성 등 청년 삶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전방위 정책이 요구됨.

○ 다섯째, 고령화 심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보성군의 노동력 부족은 심층면접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농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자녀 교육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지역주민과의 인식 개선 활동, 다문화·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이는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지역인구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임.

- 여섯째, 관광·체류 기반 확장을 위한 숙박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브랜드 강화가 필요함.
  - 보성군은 자연자원이 뛰어난에도 머무는 관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숙박 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 젊은 층 선호 공간 부족 등이 지적됨.
  -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 개선, 마을호텔·로컬 스테이 등 지역 기반 숙박모델 조성, SNS 기반 홍보 전략 강화, 관광 콘텐츠·상권·체류형 프로그램 통합 기획이 필요함.
  - 이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소비 증가를 도모하는 핵심 전략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요컨대,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정책은 금전적 지원 중심에서 정주 기반·생활인구·교육·관광·청년정책·이주민정책이 통합된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방향성 명확히 도출.
  -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를 넘어, 지역 활력의 재생·생활권 경쟁력 강화·장기적 정주 기반 구축이라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함.
  - 저출생 대응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IV

#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

1. 저출생 대응 법제 개선안
2. 저출생 대응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

## IV. 지속발전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

### 1. 저출생 대응 법제 개선안

#### 1) 인구감소대응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다수 지자체들은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구감소 대응 조례’ 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체류 유도, 관광·체험 활성화, 지역소비 촉진, 생활서비스 개선 등을 포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한 출산·양육 지원을 넘어, 청년 정착·주거·일자리 연계·돌봄 인프라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함.

- 현재 전남의 대다수 기초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유입·정착·체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정주·체류·생활인구를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조례명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인 경우가 많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주요 내용은 대동 소이함.

[예]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 현재 보성군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출산·양육·청년정착·다자녀·귀농귀촌 등 개별 정책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적 틀은 부족하며, 생활인구를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없음.
  - 보성군의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성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함.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조례’,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보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보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은 대부분 개별사업 중심·정주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적 틀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지역경제가 체류·관광 인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체류·방문·소비 중심 인구)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전혀 없음.
  
-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포함시키므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련시설 및 노후 유휴시설 활용,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등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내용

- 보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목적(안 제1조):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보성군의 정주여건을 개선, 지역활역 도모 하여 인구감소위기에 대응

-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 설정 및 운영사항, 생활인구 확대지원사항, 비용지원, 노후 유희 시설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사항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는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청년 중장년 정착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재난 재해 및 범죄예방 사업 등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문화관광 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노후 유희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5조)
- 인센티브 제공(안 제6조)

####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보성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의 생활인

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범위·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제공) ① 군수는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저출생 대응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

### 1) 생활인구 확대 방안

#### (1) 현황

- 보성군은 정주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반면,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의 5

배 이상(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4.1)에 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체류·방문 인구가 지역 경제의 실질적 유지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구조는 정주인구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활력을 회복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생활인구를 ‘전략적 자원’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 보성군은 체류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을 또한 높아 지역활동을 견인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체류기간이 짧고 소비 수준이 낮은 단기체류 중심 구조라는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이에 생활인구 정책의 핵심 목표는 ①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증가(체류일수·체류시간 확대), ② 지역 내 소비 확대(고부가 소비·상권 활성화·관계인구 경제참여 강화)로 설정함.
- 생활인구를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반복 방문(관계인구), 일정 기간 체류(부분정주), 지역소비·투자·노동 기여(생활경제 인구)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중장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2) 장기체류 기반 조성 : ‘머무르는 인구’를 만드는 전략

○ 체류기간을 1.5배 확대하는 ‘보성 장기체류 모델’ 구축

- 체류기간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핵심 전략임.
  - ‘2박 3일 이상 체류형 코스’ 개발 : 보성읍-별교-득량-회천을 연계한 장기 체류형 관광 동선을 만들고, 숙박·식음·체험을 통합한 패키지를 제공하여 체류기간을 자연스럽게 연장하도록 유도
  - ‘보성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정례화 : 단기 거주 체험형 프로그램(2주~4주)을 계절별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장기 방문 인구를 확보하고, 농촌체험·귀농·귀촌 교육·녹차 치유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체류 문화를 확산

- ‘장기체류형’ 숙박 인프라 구축 : 오래 머물 수 있는 빈집 활용형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조성, 공유 부엌·세탁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기 체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체류자 대상 교통·주차·생활편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 지역 특성과 연계한 위케이션·원격근무형 장기체류 거점 육성

- 위케이션형 인구는 체류기간이 길고, 정주·투자·귀촌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가치가 큼.
- ‘보성 위케이션 패스포트’ 도입 : 2주 이상 체류자 대상 숙박비·코워크 공간·교통지원 패키지, 체류기간에 비례한 지역화폐 지급, 위케이션-귀촌·귀농 교육-관계인구 등록까지 이어지는 구조 설계
- 기업·공공기관 장기연수형 위케이션 유치 : 기업 워크숍 + 원격근무 + 지역체험 결합 모델 개발, 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 지역인재 교류형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 녹차·치유·생태자원을 결합한 전문 위케이션 코스 개발 : ‘녹차·템플스테이형 치유 위케이션’, ‘농촌생활+원격근무 체험형 프로그램’ 등, 각 코스별 장기체류 인센티브 제공

#### (3) 소비 확대 유도: ‘머무르는 인구 → 쓰는 인구’로의 전환 전략

#### ○ 소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 생활인구의 소비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상권을 재배치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생활경제 코드’를 구축해야 함. 읍·면·시간대별 카드승인액·체류시간 기반의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보성 패스’ 도입: 체류시간 증가와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는 생활인구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숙박·식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성 패스’를 도입할 수 있음.
- 스탬프 투어·교환권·재방문 인센티브 도입: 장기체류자 및 재방문자를 위한 스탬프 투어, 지역 교환권 제공, 고소비층 대상 로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머무르는 인구 → 쓰는 인구’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녹차·발효·치유·예술 체험 등을 결합한 고부가가치형 체험소비 모델 구축 : 단순 관광이 아닌 ‘경험 중심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상권의 질적 성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4) 관계인구 육성 및 장기적 인구 전략 전환

- 생활인구 중 보성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전환
  - 생활인구 중 재방문률(42.1%)이 높다는 점은 보성군의 강점임. 이를 관계인구(보성과 지속적 관계를 맺는 인구)로 전환해야 함.
    - 명예 보성군민제(가칭)‘ 또는 ‘디지털 보성군민제(가칭)’ 도입하여 비정주민·향우·장기체류 경험자를 체계적 DB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관계인구의 명칭 공모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함.
    - 관계인구에게 지역화폐·숙박할인·문화행사 초청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보성 방문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네트워크를 상시 운영함.
    - 명절·휴가철 방문객 증가 시기에 맞춰 ‘보성 방문의 달’, 가족·향우 대상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여 지역과 외부 인구 간의 지속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관계인구를 지역의 귀향·귀촌·창업·투자 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귀향형 청년 프로그램, 지역 협력 프로젝트, 온라인 주민총회 등 관계인구 참여 구조를 확장해야 함.

## 2) IB학교 모델을 통한 교육기반형 저출생 대응방안

### (1) 보성군의 교육 현황

- 보성군의 교육여건: 학생 수 지속적 감소

- 2017년 3,845명에서 2021년 3,035명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21.0% 감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급 학교당 6.0명 수준.
- 출생률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학생 수 지속적 감소 전망
-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유아 및 청소년 유출 축소 대응 필요

○ 심층면접 결과 보성군의 인구유출의 원인은 자녀양육 및 교육 환경의 문제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보낼 학원도 부족하여 선택의 폭이 좁고 키즈카페나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 등 자녀양육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므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성군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근 도시로 나아가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의 도시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을 함.

(2) IB학교 도입의 필요성

○ IB학교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 국제 표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설립됨.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6,0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
  - IB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고력·탐구력 중심 학습을 추구하며,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을 핵심 철학으로 함.
  - IB 교육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

심이 많은 학생 육성.

- IB과정은 학령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 IV-1> IB과정의 구성

과정명	교육 목표
PYP(Primary Years Programme, 초등)	기초학습 및 공동체 가치 함양
MYP(Middle Years Programme, 중등)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탐구력 강화
DP(Diploma Programme, 고등)	학문적 심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
CP(Career-related Programme, 고교 직업연계)	실무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 ○ IB학교 운영 단계

- 관심학교 : IB학교는 우선 IB에 대한 이해 및 탐색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교원 기초 연수 및 참여를 하고 자체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행하는데 12개월 정도 소요됨
- 후보학교 : IB 공식 컨설턴트 배정 및 공식 연수 전교원 이수, 교수-학습방법 연구, 초-중 수업 일부 적용 등을 행하며 24개월 내외 소요됨
- 월드스쿨 : IB 프로그램 공식 운영하고, 초중학교의 전학년 수업에 적용하면 고등학교는 IB 학급 수업 적용 및 외부평가 실시를 행하며 5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음

<그림 IV-1> IB학교의 운영 단계



### ○ 전라남도 내 IB학교 현황 및 보성군의 도입 필요성

-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0년부터 IB공교육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현재 초등 11교, 중등 7교, 고등 5교 등 총 23개 학교가 IB관심 또는 후보학교로 운영되고 있음.

- IB교육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미래교육도시 조성계획」 과 연계되어, 교육격차 해소와 청년층 정주 유도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음.
- 보성군은 전남 동부권 내에서 학령인구 감소율이 높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을 통한 인구정주 기반 강화가 절실함.
- 또한 보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녹차밭, 갯벌, 해안습지 등)과 문화자원(보성차문화제, 태백산맥박물관 등)을 보유하고 있어, IB교육이 지향하는 '탐구 중심 지역학습'의 실험무대가 되기에 최적임.

<표 IV-2> 전라남도 IB학교 현황

2025. 7. 11. 기준, 단위: 교

지역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합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나주					빛가람초	나주금천중	전남외국어고 봉황고	4					4
영암		삼호서중	삼호고	2	용당초 삼호서초			2					4
목포	목포항도초	문태중	목포덕인고	3									3
여수	여도초	여도중		2									2
순천			순천매선고	1	매안초			1					2
광양	광양약우초	광영중		2									2
영광	영광초 묘량중양초	해룡중		3									3
장성	삼서초 사창초	삼계중		3									3
합계	7	6	3	16	4	1	2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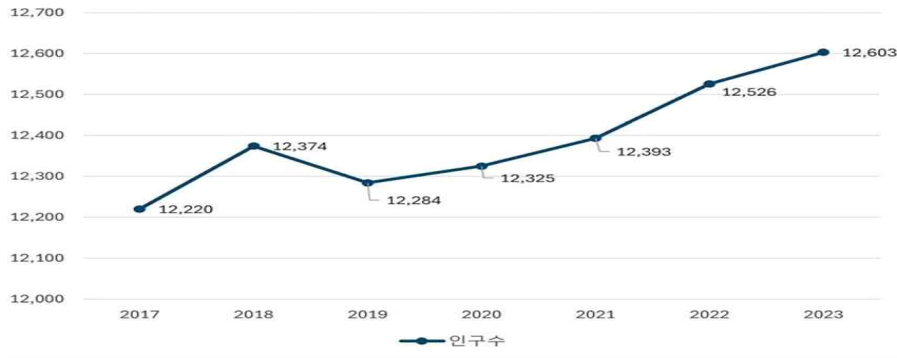
출처: 전라남도 교육청



### (3) IB학교 도입 우수사례

- 제주 표선면의 IB학교 성공사례는 보성군에 매우 현실적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함. 표선면은 IB도입 이후 학생 수 증가, 학부모 이주, 주택 거래 확대, 교원 정착률 상승 등 교육이 지역발전의 촉매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임
- 우수사례 제주도 표선면 IB학교 운영 후 인구 수, 학교 학생 수 증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표선면에 IB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의 인구 추이를 진단함.
  - 2023년말 기준 표선면의 인구는 12,603명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IV-2> 표선면 인구 변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7년 이후 표선면 내 행정리별 인구 변화를 보면 3개의 IB학교가 소재한 표선리를 비롯하여 IB학교 소재지역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짐.
- 도내 IB교육이 처음 도입된 지역이자, 3개의 IB학교가 소재한 표선리의 인구는 2017년과 비교하여 약 284명이 증가함.
- IB학교 소재지이자 표선리에 인접한 하천리의 인구는 2017년 1,072명이었으나 2023년 1,363명으로 인구가 다소 증가하여 표선면 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됨.
- 표선면과 인접한 남원읍 내 행정리의 인구가 대부분 감소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표 IV-3> 표선면 내 행정리별 인구 변화

연도 행정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표선리	5,505	5,643	5,510	5,526	5,596	5,760	5,789	+284
하천리	1,072	1,161	1,211	1,249	1,297	1,297	1,363	+291
성읍1리	1,390	1,332	1,303	1,288	1,274	1,275	1,257	-133
성읍2리	252	241	236	236	229	217	214	-38
가시리	1,285	1,269	1,298	1,353	1,390	1,359	1,348	+63
세화1리	724	729	733	724	719	733	763	+39
세화2리	735	747	763	766	754	731	711	-24
세화3리	152	158	149	131	133	137	133	-19
토산1리	455	459	452	445	431	443	453	-2
토산2리	650	635	629	607	570	574	572	-78
계	12,220	12,374	12,284	12,325	12,393	12,526	12,603	+38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인구 수 증감은 2017년 기준 2023년 인구 수를 비교하여 계산함

<표 IV-4> 남원읍 내 행정리별 인구 변화

연도 행정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신흥1리	839	806	798	782	779	787	837	-2
신흥2리	542	538	542	537	527	523	517	-25
태흥1리	780	807	800	804	804	810	785	5
태흥2리	1,150	1,122	1,165	1,127	1,104	1,115	1,086	-64
태흥3리	450	422	429	425	455	497	536	86
의귀리	1,138	1,149	1,138	1,125	1,150	1,133	1,121	-17
수망리	433	440	420	411	397	407	420	-13
한남리	467	456	485	486	481	472	466	-1
남원1리	4,593	4,583	4,553	4,519	4,462	4,443	4,337	-256
남원2리	616	605	588	609	607	596	604	-12
위미1리	1,838	1,812	1,823	1,875	1,878	1,857	1,823	-15
위미2리	2,312	2,285	2,256	2,242	2,234	2,150	2,124	-188
위미3리	389	420	419	402	427	418	423	34
신례1리	1,420	1,387	1,344	1,313	1,292	1,265	1,232	-188
신례2리	491	505	485	475	445	456	449	-42
하례1리	1,131	1,133	1,087	1,044	1,033	999	972	-159
하례2리	571	568	573	590	589	570	597	26
계	19,160	19,038	18,905	18,766	18,664	18,498	18,329	-83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인구 수 증감은 2017년 기준 2023년 인구 수를 비교하여 계산함

<표 IV-5> 표선면 및 남원읍 내 학교 학생 수 변화

연도 학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표선면	가마초	48	58	64	64	65	73	66	18
	성읍초	64	75	72	68	68	64	58	-6
	토산초	59	57	62	59	55	51	55	-4
	표선초	238	280	259	238	246	335	386	148
	한마음초	122	132	140	138	170	180	175	53
	표선중	210	220	239	272	325	366	379	169
	표선고	445	447	410	356	352	342	352	-93
	계	1,186	1,269	1,246	1,195	1,281	1,411	1,471	285
남원읍	남원초	292	300	280	270	270	273	244	-48
	신례초	64	62	56	37	44	49	43	-21
	위미초	189	198	200	189	184	174	164	-25
	의귀초	84	70	72	66	61	74	69	-15
	태흥초	79	96	98	91	95	88	75	-4
	하례초	54	51	54	52	52	57	53	-1
	흥산초	45	56	49	48	45	51	52	7
	남원중	236	216	208	219	240	246	247	11
위미중	106	103	105	93	105	99	96	-10	
계	1,149	1,152	1,122	1,065	1,096	1,111	1,043	-106	

자료: 에듀데이터서비스(<https://edss.moe.go.kr>)의 유초중등학교 개황 자료 재구성  
 주: 학생 수 증감은 2017년 기준 2023년 학생 수를 비교하여 계산함

-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IB 학교 지정 이후 전학생이 증가하였고 전학생의 35%가 제주도 내 학생, 65%가 제주도 외 학생임.
- 2022년 기준 IB교육을 받기 위해 2년 간 표선초에 96명, 중학교에 56명이 전학 옴. 이들 중 전학 온 학생의 35%가 제주도 내 타 지역에서 전학왔고, 65%가 제주도 외에서 전학 옴.
- 2022년 기준 표선초등학교 전교생은 336명이며, 2년 전보다 40% 증가한 수치임.
- 전학생의 20%가 도내 전입, 80%가 도외에서 제주로 전입함.

#### ○ 미래사회 변화와 IB교육의 필요성

-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단순지식 습득보다 창의적 사고·융합적 문제해결력·비판적 성찰력이 개인과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음.
- IB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교육모델로, 지식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 탐구·표현·협업 중심 학습을 통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둠.
- 보성군은 녹차밭·갯벌·생태습지 등 지역 특화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IB프로그램의 ‘탐구 주제(Theme of Inquiry)’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보성형 IB학교는 단순한 국제인증학교를 넘어, AI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창의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정주 및 가족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4) IB 학교 추진 전략

##### ○ 정책 목표

- 교육기반형 지역발전(EDU-Based Local Development)을 통해 청년·가족

인구의 정주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순환 구조를 구축함.

- IB학교를 매개로 “배우기 좋은 도시 → 살기 좋은 도시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주요 추진 내용

① 보성형 IB학교 설립 추진

- 전남교육청과 협력하여 별교·보성읍권 중심으로 PYP-MYP-DP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IB학교 설립
-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②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

- IB교사 인증과정 개설, 지역대학과 협력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연계형 IB커리큘럼 개발

- 갯벌·녹차·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젝트 학습(PBL) 도입
- 지역 공동체·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실천형 수업 확대

④ 주민참여형 학교운영체계 구축

- 학부모·주민이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기부단에 참여
-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확장, 교육과 공동체를 결합한 IB교육마을 조성

<표 IV-6> 정책 추진 전략 및 단계별 실행 계획

구분	추진기간	주요 내용	주관 및 협력기관
1단계	2026~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학교(초·중) 지정</li> <li>• 교사 IB 연수과정 개설</li> <li>• IB도입 환경 구축</li> </ul>	전남교육청·보성군·학교
2단계	2028~2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li> <li>• 지역연계 교육모델 시범운영</li> </ul>	보성군·전남도·교육청
3단계	2029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브랜드화 및 교육관광 연계</li> <li>• 지역자원 기반 IB프로젝트 확대</li> <li>• 가족단위 정주 유입 촉진</li> </ul>	보성군·전남교육청·지역사회

## (5) 기대 효과

### ○ 인구유입 효과

- 가족단위 정주 촉진: 보성형 IB학교 설립은 자녀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교육 여건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진출하던 인구를 유지하고 외부 학부모의 전입을 유도함.
- 신혼부부 및 청년층 유입: 교육·문화·돌봄 인프라가 결합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주거·일자리·교육이 통합된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귀향·이주 동기를 강화함.
- 지속적 인구순환 구조 형성: 양육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 양육 → 교육 → 정주”로 이어지는 인구 순환고리를 복원하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세대 재생 구조를 구축함.

### ○ 교육혁신 효과

- 공교육 신뢰 회복: 국제 표준 교육과정(IB)의 도입으로 보성 지역 학생들도 세계적 수준의 학습경험을 누릴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학생 역량 강화: 단순한 지식 암기 중심을 넘어 ‘탐구·비판·소통·창의’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글로벌 역량과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

### ○ 경제효과

- 교육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IB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연수, 교재, 체험 프로그램 등)가 지역경제에 과급되며, 교육 관련 일자리(교사·조교·행정·연구 등) 창출 효과를 유발함.
- 정주형 소비 기반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가족단위 전입이 늘어나면 주거·식음료·문화소비 등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강화됨.

○ 사회효과

- 공동체 회복과 참여문화 확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체, 지역교육기부단 등 주민 참여형 구조를 통해 '학교=마을의 중심'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 세대 간 연대 강화: 지역 어르신, 청년,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와 상호이해가 확대됨.

○ 장기효과

- '보성형 IB 융합교육도시' 브랜드 확립: 지역의 자연자원·문화자산·교육 인프라를 결합한 독창적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여, 전남 및 전국 단위에서 차별화된 '보성형 교육 브랜드'를 정립함.
-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허브: IB철학을 지역현실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 협업, 디지털 리터러시)을 갖춘 인재 배출 기반을 마련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 확립: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은 단기적인 시설투자가 아니라 인적자본 중심의 발전 모델로 전환을 이끌며, 지방소멸 대응의 모범사례로 확산 가능함.

### 3) 발달장애인 특성화학교 설립

#### (1) 보성군의 현황

- 보성군은 관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가 부재함.

#### (2) 발달장애인 특성화학교 도입의 필요성

- 특수학교가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
  - 통합교육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수요 여전히 존재

- 특히 최근 발달장애 진단 아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특수학교 포화로 인해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
-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이고, 이민이나 장기 체류까지 염두에 둔  
'교육 이주' 맥락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음.
- 현재 국내에서 특수학교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설립이 10  
년째 지연되는 사례가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보성형 발달장애인 특성화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  
니라, 전국의 장애 가족이 찾아오는 정주유입형 교육거점으로 성장할 가능  
성을 지니며, 이는 진출을 막는 효과와 더불어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음.

### (3) 우수사례

- 안성시의 경우 구 서삼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2025년 9월 1일 공립특  
수학교-모두학교로 개교함.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상주중학교를 기숙형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고, 마을과 학  
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모색하는 등 상주면에서의 변화가  
시작됨. 동고동락 협동조합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학  
교 만들기를 지향하고, 일자리·교육·주거·문화가 함께하는 마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4) 추진 내용

- 전국형 발달장애 특성화학교 설립
  - 전남도교육청 및 보성군 협력 하에 '전국형 기숙형 특수학교' 모델로 추진

- 기존 폐교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교 필요지역 내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신설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의 조례안 발의)
  -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특수학교 입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보성형 유입 교육모델 운영
  - 전국 단위 입학제도를 마련해 교육유입 인구를 창출
  
- 직업연계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 지역 산업(녹차, 관광, 농업 등)과 연계된 자립·직업훈련 과정 운영(예: 녹차제품 생산 실습, 관광안내 서비스, 생태해설 실습 등).
  - 졸업 후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업법인과 연계한 고용 창출.
  
- 가족지원 및 돌봄 통합체계 구축
  - 기숙형 생활공간과 가족쉼터형 복지시설을 병행해 장애가족의 주거·돌봄 부담을 완화
  - 부모를 위한 상담·심리지원·휴식프로그램 운영
  - 가족 단위 전입 시 정주지원을 위한 보성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전입지원금, 주거비 감면 등)
  
- 포용적 지역공동체 운영
  - 지역주민·학교·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교육협의체’ 구성
  - 마을이 함께 장애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동돌봄형 지역모델’ 구현
  
- 정책 연계 및 지원 방안
  - 「전남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2024)」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 과 연계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설립·운영비 확보/
- 'IB학교 모델'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도 IB탐구과정에 일부 참여 가능한 포용형 통합교과 모듈 개발

#### (5) 기대 효과

- 인구유입 효과(가족단위 정주 촉진):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교육을 위한 보성으로의 이사' 라는 구체적 동기 창출.
- 보성군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효과
  - "차별 없는 교육 도시" 라는 교육 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IB 교육과 함께 <보>이는 것 이상 <성>장의 가치를 믿는 보성
- 사회효과: 포용교육문화 확산, 차별 없는 공동체 실현
- 장기효과: '누구도 교육으로 배제되지 않는 보성'이라는 지역 브랜드 정립

### 4) 갯벌 등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 (1) 보성순천 갯벌 등 보성군 관광자원 현황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21년, 7월)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갯벌은 미래 세대와 공유할 유산임.
  - 현재 전남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 충남 서천 갯벌 등이 세계유산에 등재됨.

- 갯벌은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 서식지로서의 가치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인식확산이 필요함
  - 갯벌에 대한 설명 등 홍보가 덜 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낮아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갯벌 이미지는 안전 사고 등이 많아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나타남.
  - 갯벌의 유무형의 가치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갯벌의 소중함, 생태계 보전의 중요함 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요구됨.
  
- 보성군의 자연 및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데 있어 연계 부족
  - 보성군은 천연자연자원인 갯벌, 차밭, 울토해수욕장, 득량만, 여자만 등이 있고 문화예술적으로는 태백산맥 문학여행, 서편제 등이 있으며 농생산물로는 녹차, 꼬막, 키위 생산지로 유명하나 이들을 매력적인 관광테마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부족.
  - 모든 지자체가 관광자원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연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등이 요구됨.

## (2) 주요 추진 내용

-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갯벌의 중요성 및 가치 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하여 미래세대에게 교육실시.
  - 갯벌과 관련된 뽕배 축제대회에 대한 홍보 확산을 통해 갯벌과 관련된 노동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기록 및 관리.
  
- 갯벌의 보전관리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

시

- 갯벌의 보전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갯벌의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강화.
- 갯벌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 설립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프로그램 관광자원 개발.

○ 보성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보성군의 자연과 역사적인 문화예술 자원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머무는 시간과 경비를 더 많이 쓰고 가도록 함
- 보성군 관광객을 연령별로 타겟팅 하여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자원 다양화 도모

○ 관광객을 위한 주요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책자 개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보성군 주요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관광지 내 숙소, 대중교통·지역 생활 인프라 정보, 로컬 맛집 등의 정보공유 등을 할 수 있는 책자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관광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관광후기 등에 대한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자원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한번 온 관광객은 영원한 보성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성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함.
- 온라인 상의 보성군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홍보 다각화

○ 이동형 관광객이 아닌 위케이션 인구로 전향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보성군의 자연 및 관광자원을 이용해 잠깐 머무는 관광객이 아니라 힐링도 하면서 워케이션 등을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보성군에 머물면서 군민과 같이 네트워킹 하는 등 자유롭게 교류할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의 공간 마련
- 워케이션 참여자들의 체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예약 할인, 지역 내 향토음식점, 전통시장, 주요관광지 입장권 등 바우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보형 산책 및 경관 감상 중심의 단조로운 관광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코워킹 스테이션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업무를 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무공간 및 인프라 구축

### 3) 기대효과

- 인구유입 효과: 관광객 및 생활인구 등 증가로 인해 유입인구 정주화 기여
- 문화효과: 보성군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려 보성군의 지속발전에 기여
- 경제효과: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회효과: 군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향상에 기여

## 5)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및 지역정착 확대

### (1) 이주노동자 체류 및 지역정착 현황

-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체류 및 지역정착이 필요한 실정임

-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보성군의 전체 외국인 주민 수(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을 포함)는 2023년 기준 1,693명임
- 보성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41.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생산 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52.5%로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인력부족 난을 겪고 있음
- 현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91%가 현재 거주 지역 계속 희망의사를 보이고 있음(국토정책 브리프 25.3.31, 전남연구원)

○ 보성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보성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베트남 까마우성에서 42명의 노동자가 입국함.
- 보성군청은 베트남 까마우성의 공직자와 간담회 실시(2025.11.7.) 결과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송출국 다변화, 문화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국제모델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대부분은 단신 근로 형태로 체류하고 있어 가족 동반 정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만,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 정주 → 가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미비함.

○ 보성군은 보성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보성군은 보성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3.6.30)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 운영 및 지원, 수급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군수의 책무(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제4조), 사전이행사항(제5조), 전담인력배치(제6

조), 재정지원(제7조), 지도점검(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 이주노동자 등 정착을 위한 추진사업

-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및 통합적 맞춤형 지원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성군 외국인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이주노동자 정주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면 이를 통한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 근무환경 우수기업 인증제 제도를 시행하여 인증사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근무환경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 보성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합적인 조례 제정
  - 현재 보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합쳐 보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
  - 이는 지역주민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 이주 외국인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 2021년부터 농림부 소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을 통한 정착유도
  -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수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기업체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성 유지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활성화 및 플랫폼 구축

-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년이상 체류한 경우 외국인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E-7-4R) 전환 가능하므로 이 제도 활성화.
- 기존 지역특화숙련기능 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이상 체류시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동반 가족도 지역특화 우수인재의 동반 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보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상의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서는 90일 체류 거주 제한을 푸는 내용 규정 필요.

현행	개선안
<p><b>보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b></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li> <li>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li> </ol>	<p><b>보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b></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li> <li>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li> </ol> <p><u>다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의 경우 90일 초과 거주 제한에서 제외된다.</u></p>

○ 이주노동자 자녀양육비용 및 의료비 지원

- 등록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외국 국적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필요. 이는 이주노동자의 정착지원의 동기유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등록된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구성원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내에서 의료비 지원 필요

○ 다문화 자녀 교육통합 및 지역사회 문화통합 프로그램 운영

- IB학교 등과 연계하여 통합형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이주노동자 가족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여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 예) ‘보성 글로벌 데이(Global Day)’, ‘다문화 청년 캠프’, ‘국제요리교류회’, ‘차(茶)문화 국제포럼’ 등 보성의 문화자산과 결합한 상호이해형 프로그램 운영.
-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통해 근로 → 교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춤.

【우수사례】

- 전남 영암군
  - 산단중심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밀집, 지자체, 기업이 다양한 정책 추진 중이나 차별시정 교육, 임금구조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입 필요
  - 조선업 종사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 공간적으로 슬럼화되지 않도록 관리
  - 영암군청 및 산단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경남 밀양시
  - 산단 및 농공단지 주변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고르게 분포, 농업부문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단기순환중심의 계절 근로자 제도에 관심 집중,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
  -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을 전략적으로 활용 필요, 장기체류 농업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출처: 국토정책 브리프 25.3.31, 전남연구원)

### (3) 기대효과

- 인구효과: 가족단위의 외국인의 이주 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 사회효과: 청년 교류, 결혼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다양성 증진
- 문화효과: 지역문화의 다원화 도모로 '글로벌 포용도시 보성'에 기여

## 6) 마을 호텔 사업

### (1) 마을호텔 사업의 필요성

- 보성군의 관광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정비 등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이 요구됨.
  - 현재 보성군의 숙박시설은 관광객을 유입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가 요구됨.
  - 우리 마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1순위, 마을 내 빈집 정비 및 활용, 2순위,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3순위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가 높게 나타남(보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빈집 정비와 마을 환경 등 정주환경 개선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됨.
- 교통접근성 향상으로 많은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 예상에 따라 보성군의 많은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수도권 및 인근도시의 보성군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어 보성군을 찾는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 예상됨.
- 보성군은 녹차밭(다원), 벌교(태백산맥 등), 제암산 자연휴양림, 울포해수욕장, 득량 바다낚시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임.
- 경유형 관광지인 이용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필요.

## (2) 추진사업 내용

- 보성군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활용한 마을 호텔 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객이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 이후 각 지자체의 관광인프라 및 상품 개발 속에서 보성군이 가진 자연환경 및 문화예술 역사적인 스토리를 개발한 마을호텔 사업 추진.
  - 보성 녹차, 벌교 꼬막, 울포, 득량 낚시공원, 태백산맥 문학여행 코스 등 보성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 테마와 마을의 역사 등을 묶어서 마을 호텔 사업 프로그램 진행.
- 다양한 유형의 마을호텔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마을호텔,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마을호텔, 주민과 군청이 함께 하는 마을호텔 등 다양한 경영방식의 유형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과 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 마을 호텔을 개발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 사업 실시
  - 빈 집을 정비하여 지역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환경정비.

- 문제되었던 빈 집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 강화.

○ 관광하면서 힐링하고 위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의 발판 구축

- 보성군의 자연 및 역사 등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수요를 충족시켜 장기적으로 체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장동력 마련.
- 주변 인근도시와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등과의 상생 프로그램 연결.
-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보성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공간 및 스포츠 공간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3) 우수사례

**【일본의 우수사례 -1】**

- 700명 중 절반이 64세 이상 고령인구 고스게촌 — 마을호텔로 지방재생 아이콘으로 됨. 연간 20만명 관광객, 2023년 수익 5억 8천만 원 이상
  - 일본 도쿄에서부터 차로 2시간. 700명이 사는 산골마을 고스게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재미난 일을 벌일 순 없을까” 고민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했음. 어차피 소멸할 것이라면 할 일은 해보고 소멸하자는 생각이랄까.
  - 그 결과는 반전이었음. 빈집으로 신음하던 마을 전체가 스토리를 품은 호텔로 재탄생했음
  - 65세 이상 인구가 46%인 마을에 ‘드론’이 날아다니며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배송하고 늙어가던 마을은 관광객과 이주자들로 활기를 찾았고, 첩첩산중에 위치해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역이 일본 지방 재생의 아이콘으로 떠오름
  - 마을호텔 설립 및 운영
    - 150년 된 대갓집과 가파른 절벽 끝에 위치한 목조건물 두 채를 고스게촌 객실로 하고 마을 전체를 호텔로 만듦. 수개월간 마을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호소카와 대갓집의 지붕과 정원, 기둥은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했고 가마, 실을 짜던 물레 등 집안과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은 인테리어로 활용함.
    - ‘700명 마을이 하나의 호텔로’라는 컨셉으로 2019년 8월 17일 호텔이 개장함.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만드는 ‘분산형 호텔’ 전략이 본격화된 셈임
    - 주민들은 운영자로 참여했다. 대갓집인 호소카와 집안 할아버지가 호텔 가이드

드로 활동하고 있고, 마을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만쥬는 접객 서비스로 제공됨.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식자재는 호텔 식당과 휴게소에서 요리로 활용하고, 객실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고 객실에 배치된 아이패드로 레시피를 제공하고, 밀키트처럼 마을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손질해 직접 방으로 배달해 줌.

- 호텔 운영을 위해 마을과 함께 회사도 설립함. 3개 기업이 출자해 엣지(EDGE)라는 호텔 운영 회사를 만들.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 일본 내에서도 드문 일임

• 성과

- 고스게촌을 찾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3040세대임. 20대도 20%에 달함. 고스게촌 호텔 매출은 2021년 5084만4000 엔(약 4억3800만원)에서 2022년 5917만2000 엔(약 5억원)으로 16% 뛰었다. 2023년에는 6700만 엔(약 5억 8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휴게소 매출 역시 2020년 1200만 엔에서 2022년 1870만 엔으로 55% 급등

• 시사점

- 고스게촌의 성공은 소프트웨어 덕분으로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여트랜드가 진정한 관광의 가치는 경험과 체험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갯벌, 차밭 등을 활용하고. 보성군 마을의 모습과 건물을 다 유지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산된 호텔로 운영하면 될 것임.
- 보성군의 역사, 보성군민의 삶을 가지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곳과 차별화하면 충분히 경쟁력 인정됨.



**【일본의 우수사례 -2】**

- 점포 대부분이 문닫은 후세상가를 호텔로 재구성
  -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 ‘후세(布施)’는 다이쇼 시대(1912~1926년)부터 번성한 유서 깊은 번화가임. 1914년 후세역 개통 이후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했다. 역 앞에는 ‘쁘띠로드’와 ‘플라워 로드 혼마치(본정·本町)’ 등 여러 상점 거리가 맞물려 있음.
  -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1970~90년대를 배경으로 쓴 작품 ‘백야행’의 무대

로 등장할 만큼 긴 시간 번영을 누렸음. 오사카 중년층에게 쇼와 시대(1926~1989년) 부모와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던 추억이 깃든 장소임.

- 100년을 이어온 후세 상가의 영광도 일본에 불어닥친 저출생·고령화 바람을 버티지 못했다. 인구 감소로 후세역 이용객이 줄자 매출이 떨어짐. 여기에 긴 경기 침체로 히가시오사카 중소기업 단지 회사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상가는 타격을 받음. 새 도심에 대형 쇼핑몰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후세 대신 난바(難波)와 우메다(梅田)를 찾기 시작했다. 끝내 점포는 줄줄이 문을 닫았고 후세를 대표하던 극장도 사라졌음.
- 세카이호텔
  - 700여개 점포가 성업했던 후세 상가에는 현재 350여개 점포만 남았으나 몇몇 상점들은 곳곳이 매장을 지켜냈다. 100년 간 문을 연 제과점, 91년 전통 일식집, 창업 70년 튀김 가게, 90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시치미 매장은 여전히 후세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음
  - 2018년 후세 상가 골목에 문을 연 ‘세카이 호텔’은 후세 노포의 전통과 역사에 주목해 빈 점포를 객실로 리모델링해 세카이 호텔을 운영함
  - 호텔은 객실만 운영할 뿐 다른 호텔과 달리 레스토랑과 카페, 사우나와 같은 별도 시설은 갖추지 있지 않음. 대신 인근 식당과 목욕탕, 커피숍과 같은 상점과 제휴를 맺고 숙박객에게 이용을 권한다. 조식은 인근 카페에서, 석식은 인근 이자카야에서 제공하는 방식임.
  - 식사 패키지를 예약한 숙박객은 추가 비용없이 제휴 식당을 골라 이용하면 됨. 객실 목욕 시설과 별개로 숙박객에게는 동네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줌. 이른바 ‘세카이 패스’로 이용 가능한 상점은 8곳임. 제휴 여부는 상점이 자발적으로 선택함. 상생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제휴로 매출이 오르다 해도 이윤 배분 등 호텔과 상점 간 금전 거래는 일체 이뤄지지 않음.
  - 객실에서 나오면 바로 상가이고 객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므로 마을 전체가 호텔이므로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재미가 있음.
- 시사점
  - “후세를 몰랐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와 마을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호텔의 설립 취지”라며 “제휴 점포가 아니더라도 추천한 곳에서 방문객이 만족하면 그것만으로도 호텔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세의 좋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추천한다”고 말함.



## 【국내의 우수사례들】

### ○ 정선군의 마을호텔 18번가

- 국내 최초의 대표적인 마을 호텔은 마을호텔 18번가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은 2001년 폐광으로 쇠락해 가던 탄광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 마을 호텔을 설립하였다. 마을 주민 11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1인당 100만 원씩 출자해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을 결성함.
- 정선의 마을호텔 18번가는 폐광 이후 쇠락해가는 마을을 살리고자 주민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만든 호텔임. 주민들은 직접 집 주변을 청소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더 손조롭게 마을을 바꿀 수 있었음. 독특한 점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만 호텔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가 호텔이라는 것임. 체크인 마을 입구에서 하고 다이닝은 거리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서 즐길 수 있음. 즉, 마을 전체가 호텔이라고 볼 수 있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해 동안 마을호텔18번가에는 약 천여 명이 투숙을 했고, 관광객 5만 명이 찾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2호점 개설. 마을호텔 2호점에 참여하는 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민박업체들이 월예정임. 리모델링과 1호점 운영을 바탕으로 파악한 고객의 요구 사항 등을 적용할 계획임.
- 마을호텔18번가 사례에서 골목길의 빈집이 한 채 한 채 고쳐지고 쓰레기들이 더는 쌓이지 않게 하는 등 환경저비, 골목길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오래 머무를 지역으로 거듭남. 이러한 일은 주민의 힘에서 나온 결실이므로 밑에서 형성된 힘으로 나아가는 마을호텔은 진정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사례임.



○ 전주 별의별 하우스

- 전주 <별의별하우스> 사례는 이웃 주민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전주의 원도심 중노송동 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사와 <하하하집>, <사철나무집>, <철봉집>, <인봉집>, <희희당>, <봉봉한가>에 이르기까지 비어있던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사람들의 온기와 발길이 이어지는 마을로 되살리고 이 단단하고 촘촘한 그물처럼 엮여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음.



○ 서울 커뮤니티 호텔 서촌유희

- 민간 기업 주도의 커뮤니티 호텔인 서울 <서촌유희>의 사례는 주인이 주도하는 마을호텔이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커뮤니티 호텔에 해당함. 같은 대학 동아리 출신들이 회사를 창업해 기존의 호텔, 모텔, 펜션과는 차원이 다른 ‘머무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되는 혁신적 숙박모델 <스테이>를 개척해 이를 <스테이폴리오>로 진화시켜 서울의 대표적 핫플레이스가 됨.
- 서촌의 여덟 개 골목은 수평 엘리베이터가 되고, 이 엘리베이터는 서촌유희의 13개 스테이와 매력적인 가게들을 촘촘히 연결해 줌. <한권의 서점>은 서점이며서 컨시어지 역할을 담당하고, <서촌도감>은 기념품 가게 몫을 담당하며, <에디션 덴마크>는 호텔 카페로서 손님을 맞음. 서촌과 같은 대도시의 마을도 연결을 통해 마을호텔, 아니 커뮤니티 호텔이 될 수 있음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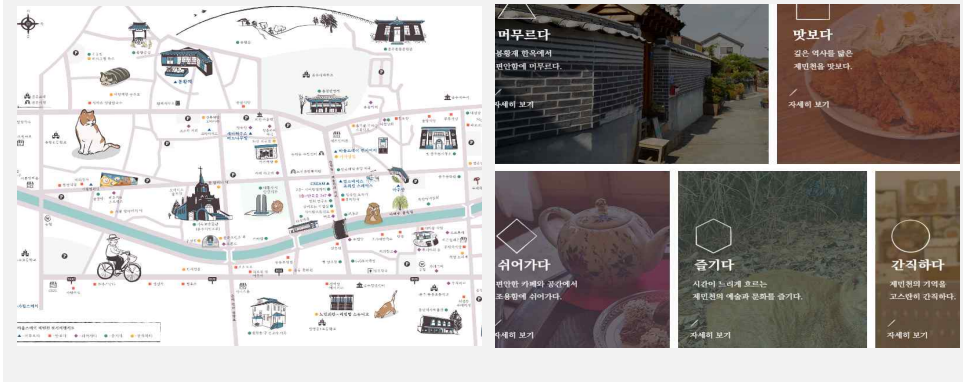


○ 군산의 후즈

- 군산의 <후즈>도 <서촌유희>처럼 커뮤니티 호텔에 가까운 사례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군산 원도심 영화동 일대에서 전개되어온 도시재생의 흐름을 마을호텔 또는 커뮤니티 호텔의 관점에서 새로운 모델이며 군산의 자원을 이용하여 <액티브로컬>에서 <로컬라이즈 군산>으로, 그리고 <후즈데어>와 <후즈넥스트> 같은 커뮤니티 호텔 '후즈'로 진화해 온 지역재생의 좋은 사례임.

○ 공주 마을스테이 제민천

- 공주의 사례는 과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와 대표적 교육 도시, 역사 도시의 명성을 지닌 공주의 원도심 지역에 있는 마을 호텔로 2018년 7월 문을 연 한옥 게스트하우스 <봉황재>를 시작으로 무인 책방 <가가책방>과 지역 작가 굿즈샵 <가가상점>, 함께 공부하는 <와플학당>과 공유사무실 <업스테어스>, 원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제민천 주변 지역의 여러 식당과 카페와 문화공간들이 퍼즐 조각들처럼 만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듯 성장하고 있는 마을 재생 사업 사례임.



(3) 기대효과

- 인구효과: 마을호텔로 인해 관광객 유치 및 위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보성군 내 장기적인 관광수요 증대
- 사회효과: 민관의 협력 또는 민간의 자원으로 이루어져 주민과 군청, 보성군과 기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 문화효과: 워케이션 인구 증가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포용적 문화 형성에 기여
- 경제효과: 관광객 및 워케이션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마을경제역량 강화

## 참고문헌

- 고영모(2024), 농촌체류형 쉼터, 체류형 관광 그리고 생활인구, 충북 Issue & Trend
- 김윤영(2025), 관광지 개발에서 인구감소 대응까지 지역관광정책 변화와 전망, 한국문화관광 정책
- 김태형(2024), 한국이 갯벌 재발견과 전남의 정책방향, JNI 이슈리포트, 15호
- 김태훈(2024), 전북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방안, 교육종합연구, 제22권 제4호, 교육종합연구소
- 박진경 이원도 김민영 양원탁 김주락 최민정(2025),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보성군청(2023), 보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보성군청
- 심미경, 정철(2025), 전남 생활인구 유입,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좌우, JNI 이슈리포트, 46호
- 여성가족부(2023), 지방소멸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안소현, 차미숙(2024),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안소현(2025),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유희연(2025),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활력 촉진방안, 국토연구원
- 유희연, 이소연, 차미숙, 유현아 조은주(2025),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정책 Brief 1007호
- 이미나(2025), 지역사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청년창업 정책: 창업기업 비즈니스 모델 피봇팅 가능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세명대학교
- 이민주(2024),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 학교 사례, 제주연구원
- 이원도(2024), 인구감소시대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이용규(2023),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와 마을호텔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

이지영(2025),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10년과 오키나와의 사례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29권 제2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임태경(2024),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대응 기금 재정지출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장인수(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월간공공정책, 224호, 한국주민자치학회

전기택(2025), 인구감소지역의 성별특성과 정책과제, KWDI 이슈페이퍼

전라남도의회(2024), 전라남도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방안, 전남의회

전라남도 의회(2025),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전남의회

전라남도 의회(2025),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정수희, 허동숙(2023), 로컬콘텐츠로서의 소도시 만들기: 한국과 일본의 마을스태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최지혜(2024), 전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전남연구원

한요셉, 김도현, 김민섭(2024),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행정안전부, 통계청(2025), 전국 인구감소지역 분기별 생활인구 산정

##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저출생정책 추진방안 연구

인쇄일 | 2025. 11

발행일 | 2025. 11

발행처 | 전라남도 보성군 의회

주소 |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 (061) 853-0031

F A X | (061) 850-5873

E-mail | <http://www.boseong.go.kr>>assembly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